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4·3 기록 연구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을 중심으로-

2019年 2月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서 유 립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제주 4·3 기록 연구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주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年 2月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서 유 림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서 유 립의 석사 학위논문으로 확인함

심사 위원장           곽 건 홍           ⑩

심 사 위 원           이 주 현           ⑩

심 사 위 원           이 경 용           ⑩

2019 년 2월

한남대학교 대학원



## <감 사 의 글>

이 글을 쓰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느낍니다. 그 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지도하시느라 오랜 기간 고생하신 이주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시절 교수님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관리학과를 알게 됐고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맞이하여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셨기에 연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 작성과 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경용 교수님과 박건홍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 어린 조언과 걱정으로 지도해주신 덕분에 연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김연진 오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이용에 도움을 주신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평화재단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연진오빠와 제주4·3연구소 선생님들, 제주4·3평화재단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동기들과 선후배들께 감사합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혼자라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선행 연구 .....	3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가치와 관리 현황 .....	7
제1절 4·3의 성격과 4·3 기록의 범위 .....	7
제2절 4·3 기록의 가치 .....	10
제3절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관리현황 .....	11
제3장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 분석 .....	13
제1절 형태별 분석 .....	14
제2절 생산연도별 분석 .....	28
제3절 출처별 분석 .....	38
제4절 제주4·3평화재단 소장 기록의 특징 .....	47
제4장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주제별 분류 .....	49
제1절 4·3 관련 주제 도출 .....	49
제2절 4·3기록의 주제별 존재양상 .....	56
제3절 주제별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향후과제 .....	82
제5장 결론 .....	86
참고문헌 .....	90
국문초록 .....	93
ABSTRACT .....	94

## < 표 목 차 >

<표 1> 제주4·3평화재단 소장 4·3 기록 목록 예시 .....	13
<표 2> 4·3 기록 형태별 분류 .....	15
<표 3> 4·3 단행본 기록 목록 예시 .....	16
<표 4> ‘제주4·3사건자료집’주요 내용 .....	17
<표 5> 4·3 해외수집자료 기록목록 예시 .....	20
<표 6> 재단간행물 4·3기록목록 예시 .....	21
<표 7> 4·3 기타문헌자료 기록목록 예시 .....	23
<표 8> 4·3 동영상 기록목록 예시 .....	23
<표 9> 4·3 사진 기록목록 예시 .....	26
<표 10> 4·3 신문 기록목록 예시 .....	27
<표 11> 4·3 음향 및 기타 기록목록 예시 .....	27
<표 12> ‘4·3의 배경’ 4·3 기록 분류 .....	29
<표 13> ‘4·3의 전개’ 4·3 기록 분류 .....	30
<표 14>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 4·3 기록 분류 .....	31
<표 15>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 4·3 기록 분류 .....	33
<표 16> 생산연도 미상 4·3 기록 분류 .....	37
<표 17> 생산주체별 4·3 기록 분류 .....	38
<표 18> ‘4·3 민간단체’ 출처 기록 분석 .....	39
<표 19> ‘공공기관’ 출처 기록의 분석 .....	40
<표 20> 시기별 주제 분류 .....	50
<표 21> 단체 및 인물별 주제 분류 .....	54
<표 22> 정부의 4·3 사업 관련 기록 예시 .....	60
<표 23> 희생자 유족 및 사건 후유증 관련 기록의 예시 .....	62
<표 24> 발굴 및 지역 관련 기록의 예시 .....	69
<표 25> 주민 관련 기록의 예시 .....	77
<표 26> 인물 별 관련 기록의 예시 .....	8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948년 4·3사건 이후 지난 70년은 제주 도민들에게 학살과 억압 그리고 투쟁의 시간이었다. 냉전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개편하려했던 미국과 이를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던 한국정부는 4·3 당시 끔찍한 학살을 일으켰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4·3은 계속 억압의 대상이었다. 이에 맞서 오랜 시간 제주도에서는 4·3의 진실을 찾는 기억 투쟁을 이어왔다.

4·3으로 인해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억울한 수감생활을 겪거나, 후유장애를 앓아야 했으며, 4·3 이후에도 연좌제의 굴레에 묶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 받아야 했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은 오랜 시간 제주도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sup>1)</sup>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4·3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보수단체의 억압에 맞서 끊임없이 싸웠다. 1960년 제주대 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진상규명운동이 있었다. 억압적인 분위기에도 1978년에는 소설가 현기영이 4·3 당시 피해가 심했던 북촌리의 이야기를 담은 ‘순이삼촌’을 발표하였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4·3연구소와 제민일보 등이 중심이 되어 학회와 세미나, 제주 4·3 자료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에서도 ‘화산도’, ‘한라산’, ‘레드헌트’같은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어 제주 4·3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 도민연대)를 결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4·3 특별법」의 제정,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도 존재하고 있다. 70주년 현안을 두

---

1) 김영범, 2005,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주4·3과 평화인권운동 소고, 『4·3과 역사』 5, 117-121쪽



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4·3 민간단체들은 4·3의 과거사 청산이 진상규명단계에 머문 상태로 책임자 처벌과 배·보상의 단계 없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화해와 상생이라는 틀에 갇혀 4·3 규명 및 기념운동이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sup>2)</sup>

또한 4·3 민간단체들은 지난 4·3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인민유격대와 미군정에 대한 규명이 부족한 채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4·3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현안이 지적되었다. 학술에서는 4·3 담론이나 해석에 대한 연구가 아닌 4·3 자체 4·3의 진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진상조사에서 미흡했던 인민유격대와 미군정에 대한 기록 발굴과, 분석을 바탕으로 4·3의 배경과 전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강조된 것이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배제된 지식이 아닌 생생한 4·3의 현장을 전달하고 4·3의 기억을 전하기 위한 현장교육과 교육을 통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가치 함양이 강조되었으며<sup>3)</sup>,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4·3기억의 대중적 전승을 위한 예술 활동과 4·3 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sup>4)</sup> 이외에도 4·3의인 발굴, 잃어버린 마을 진상조사 등 다양한 현안지적이 있었다.

이런 논의의 발전은 관련 기록을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다양한 4·3기록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인민유격대, 미군정, 잃어버린 마을처럼 정부의 진상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4·3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식기록에서 배제된 대항기억을 남겨 공식기록과 엮어서 실제사건과 기록간의 간극을 좁히고 기록의 민주화를 꾀하는 일은 현대 기록학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 4·3은 특히 오랜 시간 정부와 보수집단의 억압을 받으며 기억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정부진상조사에서 배제되었던 부분들의 규명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4·3기록은 다양한 집단, 단체,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록과 사건의 맥락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들을 포함해야 한다.

2) 고희범, 2016, 4·3운동 30년, 반성과 전망-4·3 70주년을 준비하며, 『4·3과 역사』 16, 15쪽

3)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제주 4·3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3과 역사』 16, 23-57쪽

4) 제주4·3예술 아카이브 왜 필요? “가치전승, 시민서비스”, 『제주의 소리』, 2018.06.28

이에 본고는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지금이 현재 수집되어 있는 4·3 기록들이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변하고 4·3사건의 맥락을 잘 드러내며 4·3논의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지 확인할 시점이라 생각했다. 이에 4·3의 민간 및 공공 기록 수집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현황과 존재 양상을 살피고 주제별 분석을 통해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록의 결락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 평화재단의 기록을 유형별, 시기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연구자들과 이용자들의 편의 그리고 4·3 규명 운동의 동향을 고려하여 기록을 주제별로 재분류한다. 주제별 분류를 통해 4·3 기록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필요 기록의 결손을 파악하여 수집전략 마련과 4·3 규명 및 기념 활동의 발전 그리고 4·3의 전승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제2절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4·3기록의 내용을 분석하고,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의 동향에 따라 재분류하여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락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이에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록 분석 연구와 사건 및 특정 주제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정리하였다.

우선 기록 자체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기록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곽건홍의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기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곽건홍은 대통령 기록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동안의 대통령 기록 분류 연구가 기록의 내용을 도외시킨 채 연역적 분석만으로 기능을 도출하여 기능을 단순 배열하는데 그쳤으며, 기능과 기록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에 기록 목록에 수록된 정보 외에 정확한 생산일자, 출처정보 등 기록에 포함된 정보적 가치에 주목하였으며, 기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주제별 기록의 유형을 분석하여 기록의 이해 범주를 확대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sup>5)</sup>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 역시 평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목록만으로는 기록의 정확한 생산년도나 생산자,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4·3기록을 분석할 때도 위와 같이 기록이 가지는 정보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더욱 정확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기록 분류가 가능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주제의 기록에 대한 연구는 강초룡의 연구가 있다. 강초룡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새마을운동 연구동향과 문헌정보 등을 토대로 주제어를 도출하여 주제 분류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 분류는 연구자들의 기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4·3 역시 추가 진상조사 및 진상 연구와 후속사업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기에 사료로서, 후속사업의 활용자료로서 기록이 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3 연구와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의 동향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 분류 설계가 4·3기록에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사건기록에 대한 연구는 우선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의 연구가 있다.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은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제안했다.

사건의 구성요소로서 시간, 공간, 인물의 특징을 확인하고 시간에 따라 사건의 전, 사건 전개과정, 사건 이후, 장소에 따라 ‘지역 하위 공간’, ‘지역 공간’, ‘지역 상위 공간’, 인물 및 집단에 따라 ‘행위자’, ‘피해자’, ‘관찰자’를 고려한 기록 매트릭스를 고안했다.<sup>7)</sup> 4·3 기록 역시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맥락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시간, 공간, 인물의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이상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수집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5·18 기록 수집 전략이 체계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5·18기록의 출처와 소장기관이 다양하다는 특징과 인권기록으로서 특징을 고려하여 5·18 기록의 수집정책을 수립하였다. 수집정책은 민·관 협력 수집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술의 통일 및 통합 검색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5) 박건홍, 2015, 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45

6) 강초룡, 2018, 새마을운동 기록 연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 연구』 51

가해자기록, 피해자기록, 관찰자기록으로 나누어 기록 수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가해자기록은 정부 및 육군 등의 기록으로 5·18 대응과 이후의 보상에 대한 기록으로 해당 기록이 폐기 되지 않도록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미 폐기된 기록들은 개인적으로 5·18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를 찾아 수집해야함을 지적했다. 피해자 기록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실상과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 당시 정치적 탄압과 시민학살과 관련된 기록으로 시청각기록, 언론보도기록과 더불어 구술사 수집을 강조했다. 한편 관찰자 기록은 국회, 법원, 외국 정부 등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국회의 5·18 진상규명 회의록, 청문회 기록, 검찰청 판결문 등이 속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5·18 진상규명에 중요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록이 비공개 기록임을 확인하고 ‘국제기록 평의회’(ICA)에서 ‘기록 접근 원칙’을 들어 인권 침해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기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sup>8)</sup>

4·3기록 역시 인권기록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이 4·3기록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 국회, 다양한 민간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록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민·관 협력의 기록수집 네트워크 및 기술 및 검색의 통합 관리를 바탕으로 한 기록 수집 전략이 4·3기록 수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4·3 기록은 국가기관, 민간연구기관, 신문사 등 다양한 출처에 의해 생산되었고, 문서, 사진, 영상, 구술기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4·3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 ‘국가기록원’, ‘국회’ 등 공공기관과 ‘4·3연구소’, ‘제주신보’ 등 민간단체가 있지만, 가장 많은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4·3 관련기록의 관리와 수집 그리고 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제주4·3평화재단이다. 공공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은 4·3의 추가진상조사와 기록관 운영, 기념사업 등 4·3 후속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4·3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해주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연구소, 각종 언론사 등 민간기관에서 생

8) 이상민, 2016,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수집 전략, 『기록학연구』 48

산한 기록과 4·3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기록들은 구술기록, 신문기록, 사진, 영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24,366건의 방대한 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4·3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의 활동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sup>9)</sup> 이에, 분석대상은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24,366건 중 논문 180건과 4·3과 관련 없는 일부 문서 3,207건과 신문 1,386건을 제외한 19,593건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우선 제주4·3평화재단의 4·3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평화재단의 기록 분류에 따라 유형별, 시기별, 생산주체별로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주제 분류를 설계하여 기록을 연계함으로써 주제별 4·3 기록의 존재형태와 성격을 파악하고 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자했다. 주제 분류는 4·3과 관련된 인물 및 단체, 4·3 전과 후의 시기를 고려해서 주제 분류의 틀을 설계함으로 4·3의 맥락이 들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3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주제 분류를 구체화하고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과 4·3 단체들의 4·3 현안 토론문 등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자들과 연구자들의 기록 접근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4·3기록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하고,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 관리 현황을 살폈다. 그 후 제3장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의 분류체계에 따라 형태별, 생산연도별, 생산주체별로 기록을 분석하여 제주4·3평화재단의 분류 체계의 특징을 도출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주제 분류를 통해 4·3기록의 맥락과 특징이 좀 더 잘 들어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향후과제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밝히며 마무리했다.

9)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문서의 경우 4·3 연구소가 활동 중 다양한 단체들에게 받은 협조문 및 행정문서들인데, ‘미혼남녀와 예비부부를 위한 대화기법훈련 홍보협조’,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결의문’ 등 4·3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록이다. 신문기록의 경우에도 ‘운동주 70주기 한일 손잡고 기린다’, ‘제주도 귀농귀촌 가구 5년새 22배 증가’ 등 4·3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사들이다. 논문의 경우 4·3사건의 전개과정 및 4·3 진상규명 및 기념 활동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기록’이 아니라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제2장 제주 4·3 평화재단 소장기록의 가치와 관리 현황

### 제1절 4·3의 성격과 4·3 기록의 범위

과거,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한 좌익 폭동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 특별법의 제정과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공개로 그 성격이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으로 다시 규정되었다.

4·3은 7년 동안 제주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4·3 당시 이승만 정부는 지지기반 확보와 정적 제거를 위해 반공 정책을 시행중이었고 미국 역시 냉전에 기반 한 세계질서의 재편을 구상중이었다. 이에 제주도의 사회문제는 외면당한 채 제주도는 ‘붉은 섬’으로 규정되었고, 인민유격대와 평화협상이 성공했는데도 무력진압이 선택되었다.

특히, 제주도에 계엄령이 떨어진 이후 학살 피해가 극대화 되었다. 진압군의 작전은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疏開)시키고 중산간마을을 방화하여 인민유격대의 근거지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개령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들이 마을을 덮쳐 가옥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총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무사히 해변마을로 소개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하고 총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겁을 먹은 주민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진압군은 굴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면 ‘빨갱이’로 간주하며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총살하였다.

해변마을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주민들이 마을 보초를 서는 과정에서 인민유격대의 습격이 있으면 감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당하거나 총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제대로 된 사실 입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검거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수형자가 되었으며, 심하면 총살당하기도 했다.<sup>10)</sup>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군부독재 정권 아래 제주 4·3사건은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었고 주민들은 침묵을 강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선인 276-293.



요당했으며, 연좌제와 ‘빨갱이’라는 오명으로 고통 받아야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4·3은 분명 국가 폭력과 민간인학살사건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유린과 참극의 역사임이 틀림없다. 이것이 4·3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sup>11)</sup>

그러나 4·3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4·3 민간단체들은 지난 4·3위원회의 진상조사에서 미군정과 인민유격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규명 없이 국가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4·3의 의미가 축소되었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4·3이 미군정 하의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해 침해되기 시작한 제주도의 공동체적 삶의 터전과 독립자존적인 생존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항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량학살은 그러한 항의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4·3의 역사적 의미는 저항의 측면과 인권침해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계속되는 흉년과 전염병 속에 미군정이 시행한 미곡수집정책과 대일무역 금지는 제주도의 경제를 파탄시켰고 제주도의 3.1절 기념식이 단순히 미·소 공위 재개 투쟁이 아닌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3.1절 기념식 때 제주도에서는 좌익세력 뿐만 아니라 우익인사와 관공리, 경찰간부, 검찰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준비 위원회를 결성했으며, 당시 기념 투쟁의 방침을 보면 식량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모리배 소탕, 일제적 통치기구의 분쇄, 미군정의 정권 이양 등을 표어<sup>12)</sup>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런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것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3.10 총파업이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무시하고 좌익세력의 척결에만 관심을 보이고 경찰병력과 우익

11) 김영범, 2005, 앞의 논문, 116쪽

12) ‘3·1운동 기념투쟁 방침’ 12 표어 (일반)- 민주주의적 애국투사를 즉시 석방하라!/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일제적 통치기구 분쇄하라!/ 단일 농진제 즉시 실천!/ 입법의원 타도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 파쇼분자의 근절!/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인민 경제를 파괴하는 모리배 철거한 소탕!/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신앙의 절대 자유!- 제주4·3연구소, 1991, 『제주항쟁』 1 161-163쪽

1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90-98쪽

청년단을 제주도에 증파시키고 검거선봉을 일으킨 것이 4·3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 된 것이 당시 남로당 중앙에서 봉기 지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남로당이 4·3 지도부였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4·3 원인과 인민유격대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4·3 민간단체들의 주장이다.<sup>14)</sup>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추가 진상조사활동이나 4·3에 대해 추가적인 성격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사학 연구 논문이 아니며 기록학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4·3<sup>15)</sup>을 선불리 성격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4·3의 성격 규정문제의 논란을 떠나서 4·3 기록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기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기록을 포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공식 기억은 지배집단, 주류집단에 의해 선별되고 편집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류집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억된다. 이에 공식 기억과 실제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과 공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항 기억을 수집하여 공식 기억과 실제 사건 사이의 공백을 채워서 기록의 다양성 확보와 정부의 설명책임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기록의 특성상 사건의 영향을 받거나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의 기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록을 통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을 구성요소는 인물 · 집단, 장소, 시간이 있는데 사건은 피해자, 관찰자, 주동자 등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에 변화를 가지고 오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하며, 관련 지역에 큰 변화나 충격을 주고, 때때로 지역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겪거나 사건이 영향을 주는 지역과 집단의 확장을 겪기도 한다. 이에 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집단과 지역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줬는지 파악해야 하며 사건 기록은 시간, 장소, 집단을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sup>16)</sup> 따라서 4·3 기록 또한 4·3 이전, 4·3 전개 당시, 4·3 이후의 시간에 제주도민들과 정부, 우익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 제주도 안의 마을과 주민,

14) 김영범, 2005, 앞의 논문, 116-118쪽

15) 논문 제목은 법정 용어를 고려하여 4·3사건으로 4·3을 칭했으나 아직까지 4·3의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4·3로 통칭하였다.

16)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앞의 논문, 190-196



제주도, 나아가 세계에 4·3이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는 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4·3 기록의 범위는 4·3의 배경이 되는 일련의 사건과 4·3의 전개과정 그리고 4·3 이후 4·3 규명 및 기념운동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모든 시간대의 4·3을 둘러싼 정부, 4·3 민간단체, 제주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고 제주도의 작은 마을부터 한국 사회 나아가 4·3의 세계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국가까지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4·3 기록이란 4·3의 배경이 되는 일련의 사건과 4·3사건의 전개 그리고 4·3 규명 및 기념 운동 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과 개인이 생산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제2절 4·3 기록의 가치

4·3 기록물의 가치는 첫째,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4·3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4·3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4·3 연구 자료로서 4·3 기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4·3 기록은 당시 제주도의 생활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4·3 기록 중에는 공공기록이 부족하여 4·3 규명 및 기념 운동 과정에서 생산한 구술기록이 상당수 존재한다. 구술 기록을 통해 복원된 4·3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활상은 생활사, 미시사, 여성사 등의 연구기록으로서 쓰이고 있다.

둘째, 4·3기록은 교육, 문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4·3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극악무도한 학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평화와 인권 교육과 4·3 전승을 위한 문화 활동은 필수적인 4·3 후속 작업이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과 제도권 교육만으로는 4·3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학살행위의 잔혹함과 4·3당시 치열했던 제주도민들의 삶을 생생히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학습과 함께 4·3 당시의 경험을 기록화한 구술 기록, 당시의 영상과 사진, 신문, 4·3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한 생생하고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차세대와 미래에 4·3의 의미를 전승하는 것이라면 문화와 예술은 4·3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승하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에 의

한 재생산과 재해석은 다수의 대중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제 4·3의 기억을 전승 한다.<sup>17)</sup> 4·3 기록들은 다큐멘터리나 소설, 연극 등의 소재로 활용 가능하며 4·3의 후속사업의 자원이 된다.

셋째, 4·3기록은 트라우마 치료의 가치가 있다. 물론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 · 보상이다. 그러나 4·3의 트라우마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배 ·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4·3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민들은 물질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오랫동안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아직도 피해를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유족들이 존재한다. 이에 4·3에 대한 심리적 회복과 정신적 치유과정이 필요하다.<sup>18)</sup> 기록은 어떻게 그러한 참극이 가능했는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항기록, 구술기록 등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억울한 죽음을 기록을 통해 끌어내어 산사람과 죽은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의 ‘내력국’<sup>19)</sup> 역할을 한다. 4·3 기록을 통해 피해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잘 보내고 한을 푸는 트라우마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다.

### 제3절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관리현황

제주4·3평화재단은 「4·3 특별법」 제8조의<sup>20)</sup>에 의거하여 평화공원의 운영과 관리,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의 활동과 더불어 제주 4·3 사료관의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제주4·3 평화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sup>21)</sup>를 개설하여 4·3 위원회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들과 민간기록을 수집하여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다.

17)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앞의 논문 34쪽

18) 양윤경, 박경훈, 허영선, 양동윤, 박찬식, 2016, 제주 4·3 70주년,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16, 269쪽

19) 김명식, 2015, 좌담회: 제주 4·3연구소 과거 · 현재 · 미래-죽은 역사 살리는 일이 우리 할 일, 『4·3과 역사』 15, 33쪽

20) 「4·3 특별법」 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21) 제주 4·3 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서비스 홈페이지인 ‘4·3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4·3 기록 중 공개 기록의 경우 스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누구나 기록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하여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용자들은 제주도라는 위치의 물리적 한계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문이 많이 쓰인 옛날 신문기록이나 원문을 알아보기 힘든 신문기록의 경우 기록 원본 스캔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문 및 옛날 맞춤법을 오늘날 맞춤법에 교정한 자료를 하나의 건으로 묶어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록의 원본이 필요한 연구자들부터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한 기록을 원하는 이용자들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 및 검색 기능의 경우 기록 분류가 형태별로 되어 있어서 4·3 맥락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나 인물, 단체 등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다. 특정 주제 및 인물을 찾을 시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 키워드들 사이의 전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 제목이나 키워드를 모르면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기록 접근과 정보 확장을 보장받기 어렵다.

즉,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4,366건이라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다양한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용자들은 원하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는 제주4·3평화재단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 4·3과 관련된 어떤 주제의 기록이 부족한지, 4·3의 맥락에 맞는 기록들은 전부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기록 수집 전략 마련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의 현재 분류체계에 따른 기록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좀 더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4·3의 맥락과 특징을 들어낼 수 있는 분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제3장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분석

제주4·3평화재단의 4·3 기록 목록을 살펴보면 형태별 분류를 기본으로 ‘일반분류’와 ‘유형분류’, ‘제목’, ‘요약내용’, ‘생산연도’, ‘저작권자명’, ‘수집처’, ‘권한정보’로 구성되어있다. ‘저작권자명’과 ‘수집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수집처에서 기록을 생산한 것이 아닌 여러 경로로 획득한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권한정보는 ‘공개’, ‘비공개’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이 ‘일반사용자’인 기록은 대중에 기록이 공개되어 있고, ‘최고사용자’인 기록은 대중에게 기록이 비공개되어 있다. 다음 표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공받은 기록 목록의 예시이다.

<표 1> 제주4·3 평화재단 소장 4·3 기록 목록 예시<sup>22)</sup>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유형분류	제목	요약내용	생산연도	저작권자명	수집처	권한정보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동영상	2001년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백조일손묘역 등 답사편	2001년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백조일손묘역 등 답사편 영상일시 : 2001년 1월	2001	4.3평화재단	4.3평화재단	일반사용자
미디어자료	사진	기록사진	사진	제주공항 2차유해발굴 운구 1	제주공항 2차유해발굴 운구 1 - 제례봉행 발인일시 : 6월 10일	2009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일반사용자
미디어자료	동영상	방송/영화	동영상	레드 힌트 : 빨갱이 사냥	레드 힌트 : 빨갱이 사냥 1997년 제2회	1997	조성봉	4.3평화재단	일반사용자

22) <표 1>은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을 관리·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4·3 아카이브의 기록목록을 기록공개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2018년 9월 23일 기준의 목록이다.

					인권영화제의 상영작			단	
미디어자료	신문	신문자료집	PDF	내가 겪은 사건 / 당선작 / 4·3폭동 (완) / 임두홍	내가 겪은 사건 / 당선작 / 4·3폭동 (완)	1964	경향신문	경향신문(4·3)	일반사용자
미디어자료	신문	신문자료집	PDF	내가 겪은 사건 / 당선작 / 4·3폭동 / 임두홍	내가 겪은 사건 / 당선작 / 4·3폭동	1964	경향신문	경향신문(4·3)	일반사용자
문헌자료	기타문헌자료	문서	PDF	다량·취약·생존·주도·민·대·회·자·및·회·개·최·한·다·양·생·자·도·민·대·회·관·련·하·여·	다량·취약·생존·주도·민·대·회·자·및·회·개·최·한·다·양·생·자·도·민·대·회·관·련·하·여·	1992	다량·취약·생존·주도·민·대·회·자·및·회·개·최·한·다·양·생·자·도·민·대·회·관·련·하·여·	제주·4·3·연·구·소	고리·최·관·자

## 제1절 형태별 분석

위의 <표 1>의 기록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은 기본적으로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형태별 분류에 해당하는 ‘일반분류’는 ‘일반분류’ > ‘일차분류’ > ‘이차분류’의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각각 분류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분류’는 ‘문헌자료’와 ‘미디어자료’로 나누어져있고 그 하위분류인 ‘일차분류’는 ‘문헌자료’의 경우에는 ‘단행본’, ‘보고서’, ‘재단간행물’, ‘기타문헌자료’, 로 이루어져 있고 ‘미디어자료’는 ‘동영상’, ‘사진’, ‘신문’, ‘음향’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일차분류’의 하위분류인 ‘이차 분류’는 ‘문헌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자료집’, ‘기타단행본’으로 ‘보고서’는 ‘보고서’, ‘해외수집자료’로, 재단간행물은 ‘교육’, ‘단행본’, ‘보고서’, ‘세미나’, ‘일반’, ‘정기간행물’, ‘행사’로 ‘기타문헌자료’는 ‘문서’, ‘재판기록’로 이루어져있다.

‘미디어자료’의 경우에는 ‘동영상’은 ‘기록영상’, ‘문화/예술’, ‘방송/영화’, ‘증언 영상’, ‘홍보영상’으로 ‘사진’은 ‘기록사진’, ‘유물사진’, ‘행사사진’으로 ‘신문’은 ‘신문자료집’으로 ‘음향’은 ‘음악/라디오’로 마지막으로 ‘기타’는 ‘포

스터'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의 비율은 이차분류를 기준으로 '신문자료집'이 총 13,204건으로 약 70%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문서'가 3,550건으로 약 16%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증언영상'이 1,522건으로 약 7%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에 해당하는 1,220건은 17개 분류에 분산되어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4·3 기록 형태별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기록 (건)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102
		기타단행본	22
	보고서	보고서	6
		해외수집자료	137
	재단간행물	교육	18
		단행본	21
		보고서	4
		세미나	5
		일반	7
		정기간행물	30
		행사	4
	기타문헌자료	문서	3,550
		재판기록	7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167
		문화/예술	25
		방송/영화	144
		증언영상	1,522
		홍보영상	19
	사진	기록사진	433
		유물사진	47
		행사사진	5
	신문	신문자료집	13,204
	음향	음악/라디오	12
	기타	포스터	94
합계			19,593

## 1. 문헌자료

### 1) 단행본

단행본은 자료집과 기타단행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자료집은 4·3위원회가 4·3의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4·3사건 관련 자료집, 군·경 자료집, 법률 자료집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4·3 단행본 기록 목록 예시

일차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단행 본	자료 집	계엄법/해안경비법/국방경비법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1-15권	미상	제주4·3사건위원회
		해병전투사/대한민국해군사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총무처 관계서류 대한민국법령연혁집 합본(1945년-1950년)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제47호(2002.12)	미상	제주4·3사건위원회
		역사관계철/상훈철/역사자료보고/징계철/군 사연구철	2001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수형인 명부 2,378명(48-49년 군법회의)	2002	제주4·3사건위원회
		문건 및 4·3관련소식(범국민위원회자료)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대한민국 관보 1권-5권(1948년 9월-1950년10월)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대통령령(1949년-1950년)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노근리 파일 64	2002	제주4·3사건위원회
		납조선 과도입법의원 속기록2(5권)	1947	제주4·3사건위원회
		국무회의록 목록(1951년)	1951	정부기록보존소
		국무회의록 참고철(1949년)	1949	정부기록보존소
	기타 단행 본	김익렬장군 실록유고(4·3의진실)	1988	제주특별자치도
		4·3은말한다6권1모음집	미상	제민일보
		한라산은 알고 있다(물려진 4·3의 진상)	1995	제주4·3사건위원회
		한국전미사/육사졸업생/창군/박진경대령 53주기 기념식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진중일지/토벌작전실상/조선중앙연감/북한 노획문서/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미군 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1,2	2002	제주4·3사건위원회
		제헌국회속기록1(1,3,4,5,10권 원본스크랩)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100문100답 5편: 흰옷 입은 사람은 모두 죽여라	2004	제주4·3연구소

		과거사 진상규명 자체법안 확정	2004	제주4·3연구소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왜곡 규탄 성명	2004	한국전쟁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법국민위원회

자료집의 기록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제주 4·3사건자료집 1-12권’, ‘수형인 명부 2,378명(48-49년 군법회의)’와 ‘대한민국 관보 1권-8권’가 있다.

‘제주 4·3사건 자료집’은 제주4·3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위원회가 4·3사건의 진상조사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활용한 기록이다. 제주4·3위원회는 4·3의 진상조사에 앞서 국내·외 기록을 먼저 수집했는데, 국내에서는 국회, 통일부, 법무부 등 19개 기관에서 기록을 수집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기록을 수집하였다.

그 기록의 양은 총 10,594건으로 이를 활용하기 쉽도록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건의 전개과정과 피해상황 등의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구성은 신문편 3권, 정부문서/국회속기록/잡지편 1권, 군경자료편 1권, 관보편 1권, 미국자료편 5권, 북한/러시아/무장대자료편 1권으로 모두 12권으로 편찬되었다. 자료집에 수록된 기록은 총 3,109건이며, 페이지 수는 5,847쪽에 이른다.

‘제주 4·3 사건 자료집’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과 같다. 한편, 4·3 아카이브는 ‘제주 4·3 사건 자료집’에서 10권과 12권을 제외한 총 10권의 자료집을 소장하고 있다.

<표 4> ‘제주4·3자료집’ 주요 내용<sup>23)</sup>

권호	구분	주요내용	건수	쪽수	비고
1	신문편 1	국내신문(1945.8-1948.3)	415건	448	책자
2	신문편 2	국내신문(1948.4-1949.3)	464건	540	책자
3	신문편 3	국내신문(1949.4-1961.11)	519건	640	책자
4	정부문서/국회 속기록/잡지편	국무회의록/대통령재가문서/국 회속기록/국내잡지	134건	551	책자

23)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8, 『화해와 상생- 제주 4·3위원회 백서』, 서울: 일홍, 86쪽



5	군경자료편	작전명령/인사명령/육군역사일지/경찰정보보고서	200건	507	책자
6	관보편	미군정청법령/미군정청임명사령/대한민국 관보	132건	572	책자
7	미국자료편1	주한미육군사령부	387건	502	책자
8	미국자료편2	美6사단/7사단/군사고문단/971방첩대/주한미군사/유엔한국임시위원단	243건	469	책자
9	미국자료편3	주한미육군군정청/주한미육군고문관실	137건	516	책자
10	미국자료편4	미국동군사령부/합동주간정보분석/미국정부/대한민국정부	153건	422	책자
11	미국자료편5	주한미사절단/주한미대사관/민간인문서/미국신문	136건	405	책자
12	북한/러시아/무장대자료편	북한신문,기관지,잡지/러시아자료/무장대자료	99건	275	복사본

다음으로 ‘수형인 명부 2,378명’은 ‘군법회의 명령서’와 ‘피고인 명부’가 합쳐진 기록으로 수형인의 피해 보상에 실마리가 된 기록이다. 2002년 4·3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피해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수형인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갈등이 계속되던 와중에 4·3위원회에 신고된 수형인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판결문이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으며, 판결은 없는데 그들에 대한 형량이 매우 무겁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희생자 심사를 맡은 심사소위의 조사결과 판결에 반드시 필요한 소송기록이나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군법회의 명령서’와 ‘피고인 명부’만 존재함이 드러난다. 이로 인해 군법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수형인에 대한 보상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sup>24)</sup> 한편, 현재 ‘수형인 명부 2,378명’은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기록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관보 1-8권’은 당시 한국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기록으로서 4·3배경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제주 4·3사건 당시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계엄령의 불법성과 관련이 있다. 계엄령의 불법성

24)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8, 앞의 책, 167-172쪽

은 1997년 『제민일보』에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법률 제 69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제주도에 계엄령이 내린 것은 1948년 11월 17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민일보』의 주장에 즉시 반박이 이어졌는데, ‘일제강점기 때 칙령으로 만들어진 계엄령이 해방 후에 폐지할 법률을 명시한 미군정법령 11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시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관보’는 당시 계엄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잘 담고 있다. ‘대한민국 관보’를 살펴보면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4·3계엄령이나 여순지구 계엄령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 계엄령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계엄령에 의한 것이 아닌 법률안의 제출 없이 국무회의에서 독단 의결, 제정한 것이다.<sup>25)</sup>

다음으로 ‘기타단행본’에는 4·3과 관련된 단행본들과 성명서, 제헌국회 속기록 등이 있다. ‘기타 단행본’에 속하는 기록 중 특히 중요한 기록은 ‘김익렬장군 실록유고’, ‘김익렬 연대장 「국제신문」 기고문’, ‘4·3은 말한다’ 등이 있다. 김익렬 연대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9연대의 연대장으로 4·28 평화협상 때 김달삼과의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써 사건 초기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김익렬장군 실록유고’는 4·3 초기 분위기와 동향을 ‘김익렬 연대장 「국제신문」 기고문’은 평화협상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기록이다.

‘4·3은 말한다’는 『제민일보』에서 1990년 6월 창간호부터 연재한 4·3사건에 대한 장기 연재 기사를 모아 출간한 자료집이며, 그 내용은 4·3사건 당시의 피해자들의 구술로 이루어 졌다. ‘4·3은 말한다’는 총 10년간 456회 연재되었으며, 1993년 『제민일보』는 ‘4·3은 말한다’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sup>26)</sup> 『제민일보』는 ‘4·3은 말한다’를 통해 4·3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4·3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시절 4·3의 진실 규명활동과 4·3알리기에 앞장섰다. ‘4·3은 말한다’는 4·3의 증언 기록으로서 그리고 『제민일보』의 진상규명활동의 기록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25)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앞의 책, 281-285쪽

26) 4·3진실찾기 10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을 말한다, 『제민일보』, 2007.04.07

## 2) 보고서

‘보고서’는 ‘보고서’와 ‘해외수집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고서’는 제주 4·3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수집자료’는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외수집자료’는 해외 및 대사관 등에서 생산된 4·3과 관련된 외국 보고서, 신문 기사 같은 기록이 해당된다.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4·3 배경 및 전개 상황 관련 기록, 6.25전쟁 관련 기록, 1940-50년대 동아시아와 세계정세와 관련 기록 등이 있다. 기록의 예로는 ‘한국"3.1(독립기념일)"소요(Korean"INDEPENDENCEDAY" Disturbance)’와 ‘5.10 선거 이후 상황(FO 371\_69946)’ 그리고 ‘미군정의 미곡정책-1945-1948(Rice Policy of the U.S.)’가 있다. 기록의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4·3 해외수집자료 기록목록 예시

이차분류	제목	생산연도	생산자
해외자료	한국 "3.1(독립기념일)" 소요 (Korean"INDEPENDENCEDAY" Disturbance)	1947	서울영국영사
	CIA_제주 문건 2	미상	CIA
	CIA_Cheju_communist	미상	CIA
	한국에 미국의 무장 개입(Information Report : AMERICAN ARMED INTERVENTION IN KOREA)	1950	CIA
	한지, 한국의독립을약속,한국정치상황,이승만 활동(FO483_2)	1948	서울영국 영사
	남한의 공산주의자 활동(FO 483_1)	1947	서울영국 영사
	5.10 선거 이후 상황(FO 371_69946)	1948	주소련 대사관
	뉴욕타임즈, 이 대통령의 약전(FO 371_69944)	1948	뉴욕타임즈
	제주 유권자 122,751명 중 85,517명 등록(FO 371_69943)	1948	서울영국영사
	남한에서 선거이전, 5.10 선거 이후 상황(FO 371_69941)	1948	서울영국영사
	한국의 공산주의자 선전 : 하지의 경고(FO 371_69937)	1948	서울영국영사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소요(FO 371_69936)	1948	서울영국영사
	휴전회담, UN총회(FO 371_105507)	1953	주미영국외교관

### 3) 재단간행물

‘재단간행물’의 경우 ‘교육’, ‘단행본’, ‘보고서’, ‘세미나’, ‘일반’, ‘정기간행물’, ‘행사’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의 경우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민 및 교사, 문화 해설사를 대상으로 4·3에 대한 교육을 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행본’의 경우 제주 4·3의 내용을 담은 단행본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한 문예공모 등 대회와 작품집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었다. ‘보고서’의 경우 4·3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및 4·3의 과거 청산과 관련된 제주4·3평화재단의 보고서가 포함된다. ‘세미나’는 제주4·3평화포럼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으며, ‘일반’은 4·3과 관련된 재단의 전시와 행사의 판플렛과 초대장 등의 기록이 해당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재단의 정기간행물인 ‘4·3과 평화’가 분류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행사’는 재단의 주요행사인 ‘제주 4·3 평화상’, ‘제주 4·3 장한어머니상’,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및 4·3문예 백일장’ 시상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된다. 재단간행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위와 같이 ‘재단간행물’의 경우 모두 제주4·3평화재단에서 생산한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재단간행물’에 속하는 기록들은 4·3의 진상조사 이후 4·3에 대한 교육 및 과거 청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표 6> 재단간행물 4·3 기록목록 예시

일차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재단간행물	교육	시민4·3아카데미-제7기(2014)	2014	제주4·3평화재단
		4·3문화해설사 보수교육 자료집(2017)	2017	제주4·3평화재단
		시민4·3아카데미-제10기(2017)	2017	제주4·3평화재단
		전국교원 4·3직무연수(2017)	2017	제주4·3평화재단
	단행본	제주4·3바로알기 -중국어(간체)	2014	제주4·3평화재단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입상작품집-18회(2017)	2017	제주4·3평화재단
		제68주년 4·3초대전-평화, 슬픔에 편 소망의 꽃(2016)	2016	4·3평화재단
		제주4·3평화포럼 사진집-제6회(2016. 10)	2016	4·3평화재단
		제69주년 4·3 프롤로그 전 바람 잔 날 그 때 제주(2017)	2017	4·3평화재단

	보고서	제주4.3평화재단 제1차중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	2015	제주4.3평화재단
		전국민 제주4.3사건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17	제주4.3평화재단
	세미나	4.3평화포럼-1회(2011), 제주4.3연구 및 평화교류의 확산	2011	4.3평화재단
		4.3평화포럼-2회(2012), 제주4.3의 국제화를 위하여	2012	4.3평화재단
	일반	제68주년4.3초대전-평화, 슬픔에 핀 소망의 꽃 -초대장(2016.3.25-5.31)	2016	4.3평화재단
		학생4.3문제백일장 리플렛-제3회(2017)	2017	4.3평화재단
		제69주년 4.3프롤로그전 바람잔 날, 그때 제주-리플렛(2017)	2017	4.3평화재단
	정기 간행물	4.3과 평화-1호	2010	4.3평화재단
		4.3과 평화-2호	2010	4.3평화재단
	행사	제2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자료집제	2017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장한어머니상시상식자료집(2012)	2012	4.3평화재단

#### 4) 기타 문헌자료

마지막으로 ‘기타문헌자료’는 ‘문서’와 ‘재판기록’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통령발표문’ 한 건을 제외하고 전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4·3연구소가 수집했거나 생산한 문서들이다.

‘문서’에 속하는 주요기록은 추모행사 및 위령제에 관한 기록, 특별법 촉구 및 개정을 위한 성명서, 제주4·3연구소와 관련된 학술세미나와 연구기록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제주4·3연구소의 행정과 관련된 기록과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협조문 등으로 제주4·3연구소의 활동과 4·3의 진상조사 운동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제주4·3연구소가 1989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위해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4·3의 진상조사에 주축이 된 단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기록’은 4·3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헌법소원과 관련된 판례기록이다. 4·3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우익단체와 보수단체의 다양한 항의가 있었는데 특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보수단체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기록은 그 7건으로 건수는 적지만 4·3의 진상조사과정에서 있어진 보수단체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기타문헌자료 기록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4·3 기타문헌자료 기록목록 예시

일차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기타 문헌 자료	문서	41주기 4·3추모제 홍보계획	1989	
		"4·3행사"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제1차 모임 결과와 제2차 모임 토의내용	1989	
		4·3유적지 순례 참가자 모집(1993.04.04)	1993	
		4·3피해신고서	1994	
		4·3특별법 제정기념 도민한마당 기본 계획(안)	1999	
	재판 기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 (2000헌마238, 2000헌마302)	2001	헌법재판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0헌마192, 2000헌마508)	2003	헌법재판소
		제주4·3사건관련 성명 등 취소(2004헌마577)	2004	헌법재판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2009헌마147)	2010	헌법재판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2009헌마146)	2010	헌법재판소

## 2. 미디어자료

### 1) 동영상

‘미디어자료’ 중 ‘동영상’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기록영상’, ‘문화/예술’, ‘방송/영화’, ‘증언영상’, ‘홍보영상’이 있다. ‘기록영상’은 제주 4·3 규명 및 기념 관련 활동과 사건의 영상 기록들이다. 그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4·3 동영상 기록목록 예시

일차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동영상	기록영상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1단계(화북지역) 영상보고서	2007	제주4.3연구소
		발이오름유골 4·3학술기행 / 4·3국회청원편	1991	4·3평화재단
		제주4·3치유를 위한 도민토론회	1995	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 제48주년 합동위령제	1996	4·3평화재단
		1996년백조일손영령제4회합동위령제	1996	4·3평화재단
		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회 발기인대회	1997	4·3평화재단

	문 화 / 예 술	50주년 제주4·3 해원방사탑 건립2편	1998	4·3평화재단
		제50주년 제주4·3 해원상생굿	1998	4·3평화재단
		노래빛 사월 공연(1999.12.19)	1999	노래빛 사월
		월동 걸도 저 영산 보아라 1	1999	놀이패 한라산
		놀이패 한라산사월꽃놀이1	2003	놀이패 한라산
		4·3항쟁 56주년 제11회 4·3문화예술제	2004	4·3평화재단
		4·3 마당극1편	2009	민예총
	방 송 / 영 화	제주MBC 일요리포트 제주4·3기획 '잃어버린故郷(고향)'	1991	제주MBC
		4·3기획 '4·3의 국회청원'	1993	제주MBC
		레드 헌트 : 빨갱이 사냥	1997	조성봉
		제주4·3 50주년 특별기획 '恨의 세월 반세기北村사람들'	1998	제주MBC
		4·3기록영화 제주도 메이데이 실체	1998	4·3다큐멘터리 제작단
		4·3공청회 "4·3위령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KCTV 중계방송	1999	KCTV
		특별기획 '4·3인권보고서 - 다랑쉬굴의 침묵'	1999	제주MBC
	증 언 영 상	4·3증언 나는말한다 1편 - 초토화의 광풍 "안덕면 동광리"	1999	제주MBC
		2005년 천인증언채록 고복순,오태언편	2005	4·3평화재단
		토산집단학살증언 송희석편	2009	4·3평화재단
		후유장애 (조인준)	미상	4·3평화재단
		행방불명(좌인원)	미상	4·3평화재단
		계엄령의 적법성(조용환 변호사)	미상	4·3평화재단
		목포형무소 행방불명 증언(양영호)	미상	4·3평화재단
	홍 보 영 상	대전형무소 수형인 증언(김문일)	미상	4·3평화재단
		4·3평화기념관 3관 바람타는섬-4·3의새벽(애니메이션)	2007	제주특별자치도 (주재형)
		제1회 4·3평화상 수상자 프로필-김석범	2015	4·3평화재단
		평화와 인권(제주4·3사건 영상기록)-중국어	2015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영상’은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1단계(화북지역) 영상보고서’나 ‘제50주년 제주4·3 해원상생굿’같이 문자로는 표현이 어려운 행사 및 발굴에 대한 영상들이다. 행사와 발굴의 경우 행사의 재현이나 발굴 이전 상태 및 발굴 과정의 재현에 가장 적합한 기록이 사진과 영상이기때 다양한 행사 영상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은 4·3관련 공연과 연극에 대한 영상 기록이다. 공연 및 연극 역시 앞선 ‘기록영상’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공연과 연극을 녹화한 기록으로 공연과 연극을 재현하는 기록들이다.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4·3 연극의 대표적인 단체인 놀이패 한라산의 ‘놀이패 한라산 사월꽃 놀림 1-2’, ‘월동 걸도 저 영산 보아라 1-2’ 등이 있다.



‘방송/영화’는 4·3과 관련된 방송과 영화 기록으로서 4·3에 대한 뉴스영상, 기획 다큐 및 프로그램의 영상 기록 등이 있다. 특히 제주 MBC에서 방송한 ‘4·3증언 나는 말한다.’는 4·3에 대한 증언을 방송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제민일보』에 장기 연재된 ‘4·3은 말한다.’와 제주4·3연구소의 ‘4·3구술 증언 자료집’과 함께 4·3의 진상을 밝히는 기록으로서, 4·3 미시사, 생활사 연구 기록으로서, 공식기억과 대비되는 대항기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기록으로 ‘레드헌트’가 있다. ‘레드헌트’는 4·3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아직 4·3을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1996년에 제작되었다. 이에 영화를 상영할 곳을 찾기도 어려웠으며 후에 1997년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상영되었지만 ‘레드헌트’의 감독 조성봉은 영화발표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sup>27)</sup>

‘증언영상’은 4·3을 겪은 피해자들이 4·3 현장과 경험을 증언한 영상이다. 3·1사건, 3·10총파업과 같은 4·3관련 사건들이나, 후유장애, 각 지역의 학살, 피난생활 등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며 앞선 증언 기록들과 함께 구술 기록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홍보영상’은 제주4·3평화재단의 행사 홍보영상과, 4·3평화기념관의 전시콘텐츠로 영상 기록으로 구성되어있다.

## 2) 사진

다음으로 ‘사진’은 ‘기록사진’과 ‘유물사진’, ‘행사사진’이 있다. 우선 ‘기록사진’먼저 살펴보면 ‘기록사진’은 주로 유해 발굴과정을 기록한 사진이다. 유해 발굴 당시 발견현장부터 유해수습, 정리, 운구 등 유해발굴과정의 전과정의 사진 기록이 수집되어있어서 유해발굴 과정을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물사진’은 동굴 등에서 발견된 몽둥이, 횃불심지 등의 유물의 사진과 ‘이종우’, ‘김달삼’ 등 인물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설명이 없는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확인과 기술이 필요하다. ‘행사사진’은 4·3추념식 등 행사와 관련된 사진 기록으로 4·3 관련 행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그 예시는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4·3 다큐 ‘레드헌트’ 상영될까, 『한라일보』, 1997. 11. 7



<표 9> 4·3 사진 기록목록 예시

일차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연도	생산자
사진	기록 사진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 현장조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연구소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 서측구덩이 전경	2007	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연구소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 현장 공개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연구소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사업 보고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연구소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 최종 운구 2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연구소
	유물 사진	사진-19(김달삼, 김봉현, 이종우)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사진-18(김달삼)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사진-10(해방전 제주북국민학교 교사)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빋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몽둥이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창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햇불심지	미상	제주특별자치도
	행사 사진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2017	4·3평화재단
		2018.1.19 제주4·3실무위원회 위원 방문	2018	4·3평화재단

### 3) 신문

다음으로 ‘신문’에는 ‘신문자료집’이 있다. ‘신문자료집’은 1895년부터 2018년까지 4·3의 배경, 전개과정, 규명 및 기념운동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수집한 것으로 총 63개 신문사의 기사가 수집되어 있다. 1895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사는 4·3의 배경과 사건의 전개 및 진압과정을 다루는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그 이후의 기사는 4·3의 진상조사 및 기념운동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다만, 4·3을 억압했던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속하는 1960년대부터 1987년까지의 기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기록은 시간 순으로 4·3 및 4·3 관련단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4·3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4·3에 대한 다양한 단체의 생각과 활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기 좋은 기록이다. 그 예시는 <표 1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 10> 4·3 신문 기록목록 예시

일자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신문	신문 자료 집	탁치반대! 독립전취! / 과당을 초월한 3,000만 총의 / 국제정의와 민족보존 위해 / 불합작 운동 전개 / 입정지휘로 국민총동원위원회 설치	1945	동아일보
		모리배 소굴, 제주 괴현상	1947	자유신문
		제주도민 파업 / 발포 경관 처단하라고 관민일치 / 지구전 계속	1947	동아일보
		4.3 특별법' 만들려면 제대로...	1999	한겨레신문
		제주4·3, 광주5·18을 만나다	2005	제민일보
		4·3학생문에 입상작 모음집	2005	제민일보
		수형인 진상 규명 '새 과제'	2005	제민일보
		"4·3넘어 평화의 섬 기억하자"	2005	제민일보
		4·3후유장애인에 노후지원	2005	제민일보
		"4·3행사에 대통령 오시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2015	한겨레신문
		제주4·3 희생자 제심의 여부 결렬논쟁	2015	한겨레신문
		5.18민족통일학교 3월 문연다	2015	한겨레신문
		"4·3을 갈등 넘어 평화·인권 상징으로"	2015	한겨레신문

4) 음향 · 기타

다음으로 ‘음향’에는 ‘음악/라디오’가 있다. ‘음악/라디오’는 주로 가공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콘텐츠 음향과 제주 MBC 라디오에서 방송한 라디오 드라마 ‘4·3 60주년 제주 MBC 라디오 특별기획 드라마 10부작 한라산’ 등 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포스터’가 있다. ‘포스터’는 4·3 관련 행사의 홍보 포스터들인데, 4·3추모제, 4·3문화예술제, 역사교실 포스터부터 영화포스터 까지 다양한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다. 예시는 <표 11>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 11> 4·3 음향 및 기타 기록목록 예시

일자 분류	이차 분류	건 제목	생산 연도	생산자
음향	음악 / 라 디	4·3 60주년 제주mbc 라디오 특별기획 드라마10부작 한라산_제1부 전야	2008	제주MBC
		4·3 60주년 제주mbc 라디오 특별기획 드라마10부작 한라산_제2부 봉화	2008	제주MBC
		재판과 형무소-4·3평화기념관 4관	2008	제주특별자치도

기 타	오	죽음의 섬 음향		
		동굴물소리-4·3평화기념관 1관 프롤로그 음향	2008	제주특별자치도
	포 스 터	1996 / 48주기 / 제3회 4·3미술제 포스터	1996	탐라미술인협회의
		제1회 4·3미술제 포스터	1994	탐라미술인협회
		사월곳 사팔생오칠줄 포스터	1998	놀이패 한라산
		제1회 제주4·3예술제 포스터	1994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지회

## 제2절 생산연도별 분석

본 절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을 생산연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과 사건의 관계를 알아보면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 사건과 관련된 시간은 크게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사건발생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고유의 속성이 변화돼서 각 단계에 따라 구별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

4·3의 경우 4·3 발생 전 시기에는 3·1절 기념식 발포, 3·10 총파업, 검거선봉 등 4·3의 도화선과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포함된다. 사건 발생 시기는 1948년 4월 3일 인민유격대의 12개지서 습격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고 1957년 마지막 인민유격대원이 잡혀서 사건이 완전 종결된 일련의 사건 전체를 포괄한다.<sup>29)</sup> 사건 발생 이후는 4·3이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 4·3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사건들이 포함되며 4·3 규명 운동,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이에, 4·3의 시기별 분류를 ‘4·3의 배경’, ‘4·3의 전개’, ‘4·3 종결 이후’로 나누었다. 단, 4·3 종결 이후의 기간이 매우 길며, 특별법 제정을 기준으로 4·3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4·3종결 이후 진행된 4·3 규명운동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기준으로 ‘4·3 종결 이후’를

28)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앞의 논문, 195쪽

29) 일반적으로 4·3사건의 범위는 1948년 4월 3일부터 금족령이 해제되는 1954년까지로 본다. 그러나 금족령 해제 이후에도 경찰의 진압작전이 완전 종결되지 않았고 인민 유격대원 역시 소수인원이 남아 있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 중에는 잔존 인민유격대와 경찰의 교전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진상규명 시기인 4·3 이후시기에 두는 것보다 4·3의 전개시기에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에서는 인민유격대원이 모두 잡힌 1957년까지로 ‘4·3의 전개’시기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했다.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로 세분했다. 각각의 시기분류에 해당되는 시기는 ‘4·3의 배경’은 1945년-1948년 3월, ‘4·3의 전개’는 1948년 4월-1957년,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은 1958년-1999년,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는 2000년-2018년이다.

#### 1. 4·3의 배경(1945년-1948년 3월)

‘4·3의 배경’은 1945년부터 1948년 3월까지로 4·3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포함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은 796건으로 ‘기타단행본’ 2건, ‘해외수집자료’ 29건, ‘기록영상’ 1건, ‘유물사진’ 8건 ‘신문자료집’ 756건이다.

<표 12> ‘4·3의 배경’ 4·3 기록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건
문헌자료	단행본	기타단행본	2
	보고서	해외수집자료	29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1
	사진	유물사진	8
	신문	신문자료집	756
합계			796

먼저 이 시기 기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수집자료’와 ‘신문자료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수집자료’의 경우 3·1운동 기념식 민간인 사망 사건과 남한 내 공산주의자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주로 기사와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자료집’의 경우에는 당시 정세와 제주도내의 상황 그리고 제주도에 영향을 준 미군정의 정책에 관한 기사들이 확인된다. 기사유형은 신탁통치와 독립정부수립에 관한 기사, 남로당 및 좌익단체와 서북청년회의 활동에 관한 기사, 제주도의 상황과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기사, 미국의 미국수집정책과 제주도의 모리배 및 밀수입에 관한 기사, 제주도 도 승격에 관한 기사, 그리고 4·3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3·1운동기념식과 3·10파업 그리고 검거선봉에 관한 기사가 있다.

## 2. 4·3의 전개(1948년 4월-1957년)

‘4·3의 전개’는 4·3 당시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인민유격대가 4월 3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마지막 유격대원이 잡힐 때까지의 기간으로 1948년 4월부터 1957년까지이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기록은 총 3,533건으로 ‘자료집’ 12건, ‘기타단행본’ 1건, ‘보고서’ 1건, ‘해외수집자료’ 58건, ‘문서’ 1건, ‘기록영상’ 1건, ‘유물사진’ 3건, ‘신문자료집’ 3456건이 있다.

<표 13> ‘4·3의 전개’ 4·3 기록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건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12
		기타단행본	1
	보고서	보고서	1
		해외수집자료	58
	기타문헌자료	문서	1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1
	사진	유물사진	3
	신문	신문자료집	3456
합계			3533

이 기간에 주요 기록은 ‘자료집’과 ‘해외수집자료’, ‘기록영상’, ‘신문자료집’이다. ‘자료집’에 속하는 기록은 대한민국관보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는데 대한민국 관보는 4·3의 분기점이 되는 계엄령의 위법성 및 법적 적합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해외수집자료’는 해외의 신문과 보고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 소요(FO 371\_69936)’와 같이 5·10선거에 관한 기록이나, ‘한국에서의 공산주의(FO 371\_69945)’와 ‘한지, 한국의 독립을 약속, 한국 정치상황, 이승만 활동(FO 483\_2)’과 같이 국내외 정치상황을 담은 기록이 중요 기록이다. ‘기록영상’은 1건으로 ‘May Day in Cheju-Do’라는 영상기록이 있는데, 미군이 4·3당시 내도와 오라리 사건 등을 촬영한 영상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촬영한 몇 안 되는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신문자료집’의 주요 기사 주제는 계엄령, 5·10선거, 선무공작, 예비검속, 기아, 민간인 납치, 사상자와 진압 결과, 그리고 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 이덕구 사살 등이 있다. 이런 기록들은 4·3 전개 과정

과 4·3 당시 주요 이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4·3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 3.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 (1958년-2000년)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1958년-1999년)과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2000년-2018년)는 4·3이 끝나고 제주도민들의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을 펼치는 기간이다.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은 제주 4·3 연구소나 『제민일보』 같은 민간단체가 진상조사운동을 이끌었던 기간이고,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과거청산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4·3 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에 속하는 기록은 총 3,847건으로 ‘자료집’ 5건, ‘기타단행본’ 2건, ‘해외수집자료’ 5건, ‘문서’ 1,067건, ‘기록영상’ 35건, ‘문화/예술’ 6건, ‘방송/영화’ 30건 ‘신문자료집’ 2,630건, ‘포스터’ 62건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5·16군사정변 이후 6월 민주화 운동 시기 까지 4·3암흑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4,724건의 기록 중 1958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된 기록은 단 17건이고 5건을 제외한 12건의 기록이 모두 신문기록이다.

<표 14>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전’ 4·3기록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건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5
		기타단행본	2
	보고서	해외수집자료	5
	기타문헌자료	문서	1,067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35
		문화/예술	6
		방송/영화	30
	신문	신문자료집	2,630
	기타	포스터	62
합계			3,842

이 시기에 눈여겨 볼만한 기록은 ‘문서’, ‘동영상(기록영상, 문화/예술, 방송/영화)’, ‘신문자료집’이다. 먼저 ‘문서’는 모두 제주4·3연구소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으로서 추모행사, 학술행사 등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제주4·3연구소의 활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록의 예로 ‘이제사 말함수다’ 등 구술 증언 채록집 발간에 대한 기록, ‘마당극 한라산의 티켓 판매’와 같은 4·3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의 기록, ‘다랑쉬 굴 유골 영상’과 같이 발굴과 관련된 활동 기록, ‘여명의 눈동자’, ‘도의회 4·3조사기구’설치, ‘레드헌트’ 등 4·3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 기록, 4·3역사교실이나 4·3사적지 순례와 같이 4·3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대외 활동관련 기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러 행사와 활동을 주관한 기록, 그리고 주기적인 추념행사와 학술행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영상’은 ‘기록영상’의 경우 4·3관련 행사 및 발굴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이다. 중요기록으로는 ‘다랑쉬굴 유골발견 영상’같은 발굴 영상, ‘49주년 제주4·3 희생자합동위령제’와 같은 4·3행사 기록들이 있다.

이 시기에는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과 방송·영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문화/예술’ ‘방송/영상’ 기록으로 ‘4·3 증언 나는 말한다’와 ‘레드헌트’ 등의 기획방송과 영화 기록 그리고 4·3과 관련된 이슈를 보도한 ‘다랑쉬굴 유골발견 장례식 방송’, ‘4·3국회 청원’같은 보도 기록 등이 확인된다.

‘신문자료집’은 4·3에 대한 사회의 논의와 분위기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기록이다. 4·3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말에는 ‘공비선멸기념행사’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폭동을 진압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4·19혁명 이후에는 4·3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데모에 관한 기사나 국회의 양민학살조사단에서의 4·3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군부정권의 오랜 암흑기에는 4·3에 대한 기록이 12건의 기록 외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12건의 기록은 모두 1964년 경향신문의 ‘내가 겪은 사건 당선작 4·3폭동’으로 임두홍의 ‘4·3폭동’은 4·3사건 당시 임두홍이 보고 듣고 겪은 주민들의 고통이 담담하게 나타나 있다.

4·3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1988년 이후 부터이다. 민주화의 바람에 힘입어 4·3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 분야

에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났다.

이 시기 가장 활발했던 움직임이 4·3 문학의 출판이었는데 4·3소재 문학작품이 대거 출간되면서 이에 대한 기사 보도되었고 또 이를 단속하는 문공부의 문학작품 고발 기사가 이어졌다. 이와 비슷하게 전교조 교사들이 4·3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렸다는 기사, 대학생들이 4·3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기사 또한 확인된다.

그런 한편 1992년에 다랑쉬굴이 발굴되면서 다랑쉬굴 발굴에 대한 기사와 다랑쉬굴 발굴로 인해 가속화된 4·3 진상규명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줄지어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1993년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의 설치에 대한 기사가 주요 기사이다. 그리고 결국 1999년에는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이어진다.

#### 4.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2000년-2018년)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는 특별법 제정 이후 4·3에 대한 진상조사와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기록이 생산되고 수집된 기간이다.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에 해당하는 기록은 총 10,637건으로 ‘자료집’ 79건, ‘기타단행본’ 16건, ‘보고서’ 5건, ‘해외수집자료’ 15건, ‘평화재단에서 생산한 교육, 세미나, 행사 기록 등 ‘재단 간행물’ 89건, ‘문서’ 2,481건, ‘재판기록’ 7건, ‘기록영상’ 86건, ‘문화/예술’ 19건, ‘방송/영화’ 109건, ‘증언영상’ 874건, ‘홍보영상’ 17건, ‘기록사진’ 433건, ‘행사사진’ 5건, ‘신문자료집’ 6,360건, ‘음악/라디오’ 12건, ‘포스터’ 30건이다.

<표 15> ‘4·3종결 이후, 특별법 제정 후’ 4·3 기록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건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79
		기타단행본	16
	보고서	보고서	5



	재단간행물	해외수집자료	15
		교육	18
		단행본	21
		보고서	4
		세미나	5
		일반	7
		정기간행물	30
		행사	4
	기타문헌자료	문서	2,481
		재판기록	7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86
		문화/예술	19
		방송/영화	109
		증언영상	874
		홍보영상	17
	사진	기록사진	433
		행사사진	5
	신문	신문자료집	6,360
	음향	음악/라디오	12
	기타	포스터	30
합계			10,637

이 시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4·3진상조사과정의 이슈와 관련된 기록들, 정부의 진상조사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과거 청산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진상조사와 4·3관련 행사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진행하게 되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수집 기록과 행사나 진상조사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이 대폭 증가하였고, 「4·3 특별법」과 진상조사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재판기록이 증가했다.

먼저 ‘단행본’을 살펴보면 단행본에 해당하는 기록은 다른 시기보다 4기에 양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2000년 특별법의 제정으로 4·3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4·3위원회에서 4·3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각종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행본’ 중 ‘자료집’에 해당하는 기록은 전부 해외자료, 신문, 현대사 자료 등을 모아 자료집으로 묶은 것으로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2000년대이나 실제로 자료집에 담고 있는 내용은 4·3 당시 1945-1957년 사이에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3위원회가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핵심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간행물’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생산한 기록들로 각종 교육 및 행사자료와 재단의 정기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위원

회의 4·3진상조사와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일시적인 조사와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지면서 설립이 결정되었다. 이에 ‘재단간행물’에 해당하는 기록은 모두 4기에 분포하여 있으며 ‘재단간행물’에 속하는 기록은 제주4·3평화재단의 활동과 4·3의 진상조사 이후의 지속적인 과거청산 작업과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

‘기타문헌자료’의 ‘문서’는 제주4·3연구소의 기록으로 3기의 ‘문서’와 마찬가지로 제주4·3연구소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특별법의 제정 이후 4·3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제주4·3연구소의 활동도 증가하면서 이 시기에는 ‘문서’양 또한 증가 하였다. 제주4·3연구소는 기존의 위령제와 학술제, 구술증언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4·3 진상조사를 돕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관련 기록으로는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도 등지의 발굴 사업 기록들과 1000인의 구술채록 사업 기록들이 있다. 또한 제주4·3연구소는 정부의 4·3정책 및 4·3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왔는데, 입장표명 기록으로는 피해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입장표명, 월간조선, ‘6.25사’ 등의 4·3사건 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및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입장표명, 2008년 논의 되었던 4·3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영상’의 특징은 증언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생산된 증언 영상 874건 중 26건을 제외한 848건은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1000인의 증언사업의 동영상이다. 1000인의 증언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제주4·3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4·3연구소는 1000인의 증언사업 결과물을 8권의 책으로 엮어 ‘제주 4·3구술자료 총서’를 발간하기도 했으나 제주4·3평화재단에 소장되어 있지는 않다. 나머지 26건은 후유장애, 다량쉬굴 학살, 박성내 학살 등에 대한 증언영상이다.

‘신문자료집’의 특징은 4·3의 진상조사와 과거청산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민들과의 갈등, 우익보수집단과의 갈등 등 진통과 진상조사 및 과거 청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요기사 주제는 4·3희생자접수, 4·3왜곡, 「4·3 특별법」, 4·3희생자 기준 및 보상이 있다. 우선 4·3희생자접수와 관련된 기록의 유형은 희생자 접수 시작을 알리는 기사, 희생자 통계, 희생자 접수 방법에 대한 사설 등이 있다.

4·3왜곡은 교과서나 ‘제주경찰사’, ‘6·25전쟁사’ 등 책이나 문헌의 4·3왜곡 표현과, 정치계 인사들의 4·3왜곡 발언에 관한 기사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등장하는데 특히 보수인사들의 왜곡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4·3 특별법」 관련 기사는 주로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한 것들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선정 기준 및 적은 보상금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같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는 피해자의 기준 완화 및 보상금 확대 등과 관련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2010년에는 반대되는 성격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가 확인된다. 한나라당에서 희생자심사를 받고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사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4·3희생자 기준 및 보상에 관련된 기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희생자의 기준에 대한 제주도민들과 보수단체의 입장이 다르며 지금까지도 희생자 기준의 확대와 축소의 문제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수형인의 희생자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수형인의 희생자 인정에 대한 논쟁은 2002년 수형자의 희생자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졌는데, 보수단체에서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 당시의 판결이 부당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수형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희생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형자들의 희생자 인정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이 보수단체들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단체의 4·3왜곡발언이나 수형자의 희생자 인정 반대 기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보수단체에서는 4·3을 ‘남로당의 공산 폭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4·3당시 있었던 국가 폭력은 인정하지만 인민 유격대 대원들이나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4·3을 이념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된다.

그 외에는 2000년 특별법의 제정,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과 대통령사과, 2005년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선포, 2008년 유해발굴 등의 기사들이 있다.

## 5. 생산연도 미상

제주4·3평화재단의 4·3 기록 중에는 생산연도를 알 수 없는 기록 또한 778건 존재한다. 기록형태별로는 ‘자료집’ 4건, ‘기타단행본’ 3건, ‘해외수집자료’ 30건 ‘문서’ 2건 ‘기록영상’ 44건 ‘방송/영화’ 5건 ‘증언영상’ 648건 ‘홍보영상’ 2건 ‘유물사진’ 36건 ‘신문자료집’ 2건 ‘포스터’ 2건이다.

<표 16> 생산연도 미상 4·3 기록 분류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건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4
		기타단행본	3
	보고서	해외수집자료	30
	기타문헌자료	문서	2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44
		방송/영화	5
		증언영상	648
		홍보영상	2
	사진	유물사진	36
	신문	신문자료집	2
	기타	포스터	2
합계			778

‘생산연도 미상’의 기록들은 생산연도가 표기가 없는 기록들로 제목 및 내용을 통해 생산 시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생산연도는 알 수 없다. 대부분 ‘해외수집자료’와 ‘기록영상’ 그리고 ‘증언 영상’이며 오래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들이다. 특히 ‘해외수집자료’의 경우 ‘미국의 제주관련 문건에 관한 문건’, ‘베트남 미라이학살사건 관련 미8군 기록 THE MY LAI INQUITRY\_Lt. Gen W\_R\_Peers’같이 약 50년 이상 전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기록영상’에 속하는 기록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인터뷰(현길언교수)’, ‘잃어버린마을 다랑쉬굴 탐사편’과 같이 1987년 이후 4·3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과정 및 정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4·3평화공원의 공사, 진상규명, 4·3의 평가,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4·3 청원서 등 4·3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록들이다.

‘증언영상’은 4·3의 경험자들의 구술 증언 영상으로 후유장애, 계엄령, 수형인, 3.1사건, 피난생활, 소개령, 토벌대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되어 있다.

생산연도를 알 수 있는 ‘증언영상’ 중 ‘1000인의 증언’영상과 비교할 수 있는데 ‘1000인의 증언’은 4·3 당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4·3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주제별 증언 영상은 개인 보다는 사건의 실태와 진상규명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제3절 출처별 분석

다음으로 4·3 기록을 출처별로 분석하였다. ‘4·3평화 재단’, ‘4·3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과 같이 하나의 단체이지만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이 통일 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단체로 인식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출처는 총 546개의 단체가 있었고 편의상 분야별로 ‘4·3민간단체’, ‘공공기관’, ‘언론/방송/출판’, ‘종교’, ‘대학/학술’, ‘해외’, ‘정치/정당’, ‘예술/문학’, ‘출처 미상’으로 총 9개로 분류하였으며, 출처가 한 단체가 아닌 여러 단체일 경우 중복 분류하였다.

기록의 양은 ‘4·3민간단체’ 2,835건 ‘공공기관’ 2,838건 ‘언론/방송/출판’ 13,458건 ‘종교’ 36건 ‘대학/학술’ 111건 ‘해외’ 127건 ‘정치/정당’ ‘223’건 ‘예술/문학’ 142건, ‘출처 미상’250건이다.

<표 17> 생산주체별 4·3 기록 분류

분류	단체(개)	기록(건)
4·3민간단체	61	2,836
공공기관	93	2,838
언론/출판/방송	116	13,458
종교	18	42
대학/학술	127	291
해외	41	127
정치/정당	24	230
예술/문학	30	163
출처미상		250
누적	546	20,180

## 1. 4·3 민간단체

‘4·3민간단체’는 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4·3유족회 등 4·3과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민간단체들이다. 기록의 형태는 ‘문서’와 ‘기록사진’이 각각 2,377건, 427건으로 ‘4·3민간단체’출처 기록 전체 2,835건 중 약 99%에 해당하며, 제주4·3연구소에서 2,176건 4·3유족회에서 155건, ‘4·3도민연대’에서 96건의 기록을 생산하여 전체 2,836건 중 약 85%를 차지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8> ‘4·3 민간단체’ 출처 기록 분석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출처	건	합계
문헌자료	단행본	기타단행본	4:3연구소	4	4
	기타 문헌자료	문서	4:3연구소	1,739	2,378
			4:3유족회	149	
			기타	390	
미디어 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4:3연구소	3	4
			4:3도민연대	1	
		방송/영화	4:3연구소	1	2
			다큐멘터리 제작단	1	
	사진	기록사진	4:3유족회	5	427
			4:3연구소	422	
	기타	포스터	4:3연구소	7	21
			4:3유족회	1	
			기타	13	
총합					2,836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제주4·3연구소와 4·3유족회 그리고 4·3도민연대가 민간의 4·3 진상 규명 및 기념운동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4·3연구소는 1988년 설립 당시부터 증언채록 및 4·3피해조사, 학술연구 및 세미나, 자료 발굴, 출판, 보고서, 유물/유적지 발굴, 4·3역사기행, 추모 및 대외사업, 역사교실, 4·3희생자 유해 발굴 등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학술·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sup>30)</sup>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이 행정문서로 제주4·3연구소의 위와 같은 활동을 파

30) 제주 4·3연구소(<http://www.jeu43.org/>)

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는 다른 민간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서’기록의 출처는 ‘대통령사과문’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주4·3연구소이 출처이며 제주4·3연구소의 전반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록들이 소장되어있다. 다만 4·3유족회 등 4·3 민간단체들과 중복 출처인 기록들이 있는데 주로 4·3 추모식이나 「4·3 특별법」의 제정 관련 활동 기록들이다.

‘기록사진’은 5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4·3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4·3연구소가 정부와 협업한 유해발굴사업관련 기록이며, 나머지 5건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기록으로 유해 발굴 운구에 관한 사진이다.

한편, 확인되는 민간단체의 기록들은 출처는 다양하나 거의 제주4·3연구소에서 수집한 문서기록으로 제주4·3연구소이외의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기록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주4·3연구소의 경우에도 주로 행정기록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연구소의 활동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2. 공공기관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출처가 각종 공공기관인 경우이다. 제주4·3평화재단, 4·3위원회와 같이 4·3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국방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생산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으로 전체 2,738건 중 약 64%에 해당하는 1,744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 속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총 629건의 기록이 수집되어 있으며, 뒤이어 4·3위원회 기록 277건, 제주도의회 기록 총 33건이 수집되어 있다.

<표 19> ‘공공기관’ 출처 기록의 분석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출처	건	합계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정부기록보존소	11	91
			4·3사건위원회	83	
			기타	4	

		기타단행본	4·3사건위원회	12	13
			제주특별자치도	1	
	보고서	보고서	4·3사건위원회	3	5
			제주도의회	1	
			제주특별자치도	1	
	재단간행물	해외수집자료	4·3사건위원회	9	9
		교육	4·3평화재단	18	18
		단행본	4·3평화재단	21	21
		보고서	4·3평화재단	4	8
			4·3사건위원회	4	
		세미나	4·3평화재단	5	5
		일반	4·3평화재단	7	7
			4·3평화재단	30	37
		정기간행물	4·3위원회	7	
		행사	4·3평화재단	4	4
	기타문헌자료	문서	4·3위원회	100	538
			4·3평화재단	40	
			국회 및 기타 의회	22	
			제주특별자치도청	142	
			제주도의회	32	
			기타	204	
		재판기록	제주4·3위원회	2	7
			헌법재판소	5	
미디어자료	동영상	기록영상	4·3평화재단	158	158
		문화/예술	4·3평화재단	4	4
		방송/영화	4·3평화재단	4	4
		증언영상	4·3평화재단	1521	1521
		홍보영상	4·3평화재단	5	17
			제주특별자치도	12	
	사진	기록사진	4·3평화재단	6	430
			제주특별자치도	424	
		유물사진	제주특별자치도	47	47
		행사사진	4·3평화재단	5	5
	신문	신문자료집	4·3위원회	67	67
	음향	음악/라디오	제주특별자치도	2	2
	기타	포스터	4·3평화재단	1	1
합계					2,838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제주4·3평화재단이 4·3평화공원의 관리, 4·3 추가진상조사, 4·3기록관리 등 4·3 관련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중추 기관이 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4·3기록을 생산했고 기록 수집도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생산한 기록은 전체 24개의 형태분류 중 16개 분



류로 제주4·3평화재단은 가장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생산했다. 제주4·3평화재단 기록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증언영상’으로 대부분이 제주4·3연구소를 지원하여 진행한 ‘1000인의 증언사업’ 관련 기록이다.

제주4·3평화재단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 수집된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다. 총 629건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4·3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4·3연구소가 함께 유해발굴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해발굴 사업 관련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4·3 당시의 사진과 그 당시 학교들의 졸업사진 등의 기록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기록이다.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 생산된 곳은 4·3위원회이다. 4·3위원회는 2000년 「4·3 특별법」의 제정으로 4·3의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산하 기관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4·3기획단)’, ‘제주 4·3사건 처리지원단(4·3지원단)’, ‘제주 4·3사건 지원 사무소(4·3사업소)’을 가지고 있다.

4·3위원회는 설립 이후 4·3의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희생자 및 유족 심사와 보상, 4·3평화공원 조성과 제주4·3평화기념관 건립 등 위령사업과 유해발굴 그리고 유적지 복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4·3위원회의 기록은 총 295건으로 그 중 ‘문서’가 100건, ‘자료집’이 83건, ‘신문자료집’이 67건이고 나머지 45건은 ‘기타 단행본’, ‘보고서’, ‘해외수집자료’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4·3위원회의 기록은 전부 4·3의 진상조사와 4·3 관련 사업을 위해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으로 4·3 진상규명 및 사업에 대한 보고서와 각종 자료집 그리고 옛날 신문의 모음집 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제주도의회의는 총 33건의 기록을 생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1993년부터 4·3특별위원회(이하, 4·3특위)를 조직하여 4·3의 진상조사와 「4·3 특별법」 국회 상정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4·3특위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수집되어있다.

### 3. 언론/출판/방송

다음으로 ‘언론/출판/방송’은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그리고 출판사가 생산한 기록이다. 총 13,4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기록이 해당되며,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그리고 『한겨레』가 각각 4,005건, 1,552건, 1,425건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방송사 중에서는 MBC가 138건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그 중 126건이 영상과 음향기록으로 4·3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 방송 영상 기록이다. 제주 MBC의 기록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99회에 걸쳐 방송한 ‘4·3증언 나는 말한다’와 4·3사건을 소재로 한 10부작 라디오 드라마 ‘한라산’등 4·3 특별 기획 프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 MBC에서는 2004년 4·3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이 ‘문서’에서 1건과 ‘포스터’ 1건이 존재한다.

### 4. 종교

다음으로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각종 종교 단체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그 양은 42건으로 가장 적다. 종교단체에서 생산된 기록은 적은 수이지만 4·3에 대한 종교인들의 진상조사활동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종교’단체 생산 기록은 18개의 단체 기록이 고루 소장되어 있으며, 기록형태는 ‘문서’ 27건, ‘신문자료집’ 7건 ‘포스터’ 1건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4·3에 대한 종교단체의 성명 발표, 4·3 종교인 대회 등 종교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과 관련된 기록과 4·3 추도예배, 4·3진혼제, 4·3원혼 천도제 등 제4·3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행사의 기록이다.

### 5. 대학/학술

다음으로 ‘대학/학술’은 대학교, 연구단체, 연구원들이 생산한 기록으로, 논문이나 간담회 등 학술적인 기록과, 대학생들의 4·3 진상조사 운동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주대학교가 85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생산했다.

제주대학교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기록을 생산한 이유

는 제주대학교가 제주도 지역의 대학교인 만큼 4·3에 대한 관심도 다른 대학교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4·3연구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유해발굴사업을 위탁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는 유해의 유전자 분석, 혈액분석 등을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활동을 맡았다<sup>31)</sup> 이에 제주 대학교에서 생산한 기록 중 많은 수가 유해발굴과 관련된 기록이다.

## 6. 해외

‘해외’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총 127건이 존재한다. 해외 기록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2001년 해외기록을 수집할 때 원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당시 수집된 해외기록은 자료집 형태로 남아있다.

4·3 위원회는 지난 2001년 4·3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방문하여 기록 조사 및 기록 수집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와 ‘맥아더기념관(MacArthur Memorial), 미육군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등의 기관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지 등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약 800건의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연방 기록관리청,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등에서 19건의 기록을 입수하였고, 일본에서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재일동포 4·3연구단체 등에서 92건의 기록을 입수하였다. 이 기록들은 활용 편의를 위해 국내 자료들과 함께 ‘제주4·3자료집’으로 편찬되었고 8권부터 12권까지가 해외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127건의 기록은 이 자료집에 속하지 않는 기록으로서 자료집으로 묶을 수 없는 영상기록, 해외 책자, 지도 등의 기록이거나 ‘제주4·3자료집’이 편찬된 2001년 이후에 수집된 기록들이다. 대표적으로 CIA에서 2001년 이후 공개한 기록들과, 미군이 4·3당시 현장을 촬영한 ‘May Day in Cheju do’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해외 기록 중에는 4·3당시 생산된 기록이 아닌 비교적 최근 생산

---

31) 제주 4·3희생자 유해발굴 설명회, 『연합뉴스』, 2010.04.06

된 기록들도 있다. 주로 4·3의 세계화와 관련된 기록으로 다른 나라의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된 기념재단과 함께 학술행사를 진행한 기록이다. 기록 예를 들면 ‘Memorial Foundation of 228’의 ‘1st Taiwanese-Korean Human Right Forum(1회 대만-한국 인권포럼)’이 있다.

## 7. 정치/정당

다음으로 ‘정치/정당’은 국회의원, 도의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정계 인사와 정당에서 생산한 4·3기록이다. 가장 많은 기록을 생산한 단체는 민주노동당으로 105건의 기록을 생산했고,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46건, 강창일 의원이 30건의 기록을 생산했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기록은 4·3과 관련된 정당의 입장을 알리는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보수정당이지만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경우에는 ‘4·3관련 3단체의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적극 동의 하며 3단체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 ‘4·3평화공원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한 논평’, ‘反4·3적 反 도민적인 정부의 4·3 시행령 제정 자세를 규탄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 촉구한다’ 등과 같이 4·3에 대한 제주도 시민단체들의 뜻에 긍정적인 입장과 지지를 취하는 내용의 기록이 다수 존재하였다.

한편, 강창일 의원의 기록은 전 제주4·3연구소 소장으로서 학술기록과 국회의원으로서 「4·3 특별법」 및 6.25전쟁사의 4·3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기록, 국회의원 활동관련 기록이 있다.

## 8. 예술/문학

다음으로, ‘예술/문학’은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계 단체가 해당하며 가장 많은 기록을 생산한 단체는 163건 중 50건의 기록을 생산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다. 민예총 제주지사는 1994년부터 매해 제주 4·3을 기리는 문화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4·3연구소와 4·3유족회 등과 함께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민예총 제주지사 에서 생산한 기록은 주로 문화예술제에 대한 기록과 4·3의 진상규명 활동 기록이다.

다음으로 많은 기록을 생산한 단체는 45건을 생산한 놀이패 한라산이다. 놀이패 한라산은 4·3을 소재로 한 연극 ‘한라산’, ‘백조일손’, ‘헛묘’ 등을 성공리에 공연하였으며, 매해 다양한 정기공연을 열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연 포스터와 공연을 녹화한 영상, 공연 진행과 관련된 행정업무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예술/문학’단체와 관련된 가장 많은 형태의 기록은 문서와 포스터로 각각 문서 83건 포스터 40건이 있다. 문서는 티켓 판매, 홍보 등에 대하여 제주4·3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한 기록이고, 포스터는 공연 및 예술제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기록이다.

## 9. 출처미상

마지막으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록은 249건이 있다. 249건 중 ‘문서’는 225건, ‘해외수집자료’는 17건, ‘증언영상’과 ‘홍보영상’이 각각 1건씩 있으며 ‘방송/영화’가 2건 마지막으로 ‘포스터’가 2건있다.

‘문서’ 기록들을 살펴보면 ‘4·3무크지 발간계획서’, ‘41주기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규명 촉구대회’ ‘4·3치유와 화해를 위한 종교인 대회’, ‘울산대 4·3정신계승 및 진상규명을 위한 추모집회 서명운동’등 의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주4·3연구소 및 종교단체, 대학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 생산된 기록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출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수집자료’의 경우 옛날 신문기사와 미군의 자료인데 신문의 경우 정확한 신문사를 알 수 없고, 미군의 자료는 정확한 부대 및 소속을 알 수 없는 기록들이다. ‘증언영상’, ‘홍보영상’, ‘포스터’는 기록을 살펴보면 ‘형무소 증언(양창문)’, ‘동지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포스터’ 등으로 출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방송/영화’기록은 일본 및 대만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및 방송 · 기록 영상으로 만들어진 국가만 표시되어 있다.

#### 제4절 제주4·3평화재단 소장 기록의 특징

지금까지 제주4·3평화재단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의 존재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및 분류체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록이 형태별로 분류되어있다는 점이다. 기록이 형태별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형태별로 어떤 기록이 있는지 파악하기 쉽고 원하는 형태의 기록이 있는 경우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별로 분류는 사건의 맥락이나 기록의 특징을 보여주기 어려우며, 특정 이슈나 집단 혹은 인물의 기록을 파악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

둘째, 생산자 및 생산연도 추정의 어려움이다. 이는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 중 기록을 수집하여 교정 작업을 거쳐 자료집 및 스크랩형태로 재생산한 기록들의 생산자 및 생산연도 기술 및 분류를 재생산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다.

특히 2000년대 4·3위원회가 생산한 자료집과 스크랩기록의 경우가 해당된다. 4·3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기록을 수집하여 편집·교정하여 자료집과 스크랩 형태로 재생산했는데 이 기록들을 기술할 때 재생산 시기를 기준으로 생산자는 4·3위원회 생산연도는 2000년대로 기술하였다. 이에 출처 및 생산연도와 실제 기록 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록의 내용을 직접 확인 하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활동의 기록인지, 언제 생산된 기록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4·3사건 자료집’이나 ‘제헌국회 속기록 스크랩’의 경우 저작권자가 4·3위원회로 되어있고 생산연도가 각각 2002년 2001년으로 되어있지만 내용 상 생산자는 ‘4·3사건 자료집’의 경우 한국 정부, 미군정, 경찰, 군 등이고 ‘제헌국회 속기록’은 제헌 국회이며, 내용 상 생산연도는 4·3 전개과정 당시로 1945-1957년 사이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시기에 생산된 기록에 접근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록의 내용을 보고 어느 단체와 관련 있는 기록인지 어느 시기와 관련 있는 기록인지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형태별 분류는 기록의 맥락을 분절시켜 4·3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내기 어려우며 기록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있다. 또한 출처와 생산연도의 분류 또한 분류와 기록 내용 간의 오류가 발견된다.

따라서 4·3이 어떤 분위기와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활동과 성격은 어떤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어떤 결과가 발생했으며 지역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4·3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를 설계하여 사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4장에서 4·3의 시기별 전개과정과 관련 단체 그리고 4·3 연구의 동향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체계를 조직하여, 4·3기록의 맥락과 특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제4장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주제별 분류

### 제1절 4·3관련 주제 도출

#### 1. 주제 도출 과정

4·3기록을 4·3전개과정과 진상조사, 4·3관련 집단 등 4·3의 맥락을 고려하여 분류하기 위해 4·3과 관련된 시간과 인물을 고려하여 주제 분류의 틀을 설정하고 학술연구를 토대로 주제를 세분화 하였다.

시간 중심 분류의 경우 시기별로 4·3 사건 전, 사건 당시, 사건 이후의 4·3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주제 분류하였고, 인물을 중심으로 한 분류는 4·3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4·3이해 단체, 주민, 인물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세부 주제의 선정은 4·3 학술 연구 논문에서 주제어를 추출하여 비슷한 성격을 가진 주제어들을 통합하여 주제화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주제 선정에 참고한 연구 논문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구 논문 중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109편의 연구와 DBPIA의 검색기능으로 확인한 28편의 연구 그리고 4·3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 『4·3과 역사』에 실린 연구 중 4·3외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연구를 제외한 121편의 연구 논문이다.

기간적 범위는 4·3에 대한 연구가 6월 민중항쟁 이후 활발해졌기 때문에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했으며, 연구자가 키워드를 제시한 경우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를 토대로 주제어를 추출하였으나, 연구자가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제목을 토대로 주제어를 추출했다. 또한 동의어와 유사어는 하나의 주제어로 간주 하였다. 그 결과 ‘4·3항쟁’, ‘4·3반란’, ‘인민위원회’, ‘3.10 총파업’, ‘남로당’, ‘레드콤플렉스’, ‘생활사’, ‘다크투어리즘’, ‘집단학살’, ‘제주 4·3 평화공원’ 등의 주제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 연구를 통해 파악한 주제어는 범주가 제각각이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 발행 문헌, 연구 논문외의 4·3학술자료<sup>32)</sup>,

32) 정부 발행 문헌은 4·3위원회에서 발행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화해와 상생 제주 4·3 위원회 백서』을 학술 자료는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학회』 35, 양윤경 외 4명, 2016, 제주 4·3 70주년,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sup>33)</sup>을 바탕으로 주제를 보완했다. 세부 주제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시기별 주제 분류

4·3과 관련된 시기를 ‘4·3의 배경’, ‘4·3의 전개’, ‘4·3 이후’로 나누고 주제를 매칭한 후 비슷한 성격의 주제어 끼리 묶어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기를 기준으로 1차 분류, 주제어 끼리 묶어 만든 주제로 2차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매칭된 주제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0> 시기별 주제 분류

1차분류	2차분류	주제어
4·3의 배경		미곡수집정책, 대일교역통제, 제주도 도(道)승격, 3·1절 기념식 발표, 3·10 총파업, 검거선풍
4·3의 전개		4·3 지서습격, 4·28평화협상, 오라리 방화사건, 5·10 총선, 계엄령, 소개령, 선무공작, 예비검속, 한라산 금죽령 해제
4·3 이후	특별법/진상조사 /관련정책	특별법, 정부진상조사, 관련정책, 4·3위원회, 진상 조사 보고서, 특별법 개정
	후속사업	4·3평화공원, 4·3기념관, 4·3평화재단, 장한 어머니 상, 4·3 평화상, 4·3예산
	사건 피해 및 희생자·유족	연좌제, 후유장애, 수장, 예비검속, 수형인, 피해자 보상
	학술	국제 학술대회, 4월제 학술세미나
	문화/예술/방송	4·3 예술제, 4·3문학, 4·3 연극, 4·3 영화, 구술 증언 방송, 4·3 미술, 4·3 음악, 4·3 보도, 디아스포라, 트라우마

역사』 16, 교회법, 2016, 4·3운동 30년, 반성과 전망-4·3 70주년을 준비하며, 『4·3과 역사』 16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제주 4·3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3과 역사』 16 등을 참고 했다.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와 4·3위원회 백서의 경우 4·3의 전개과정과 정부의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4·3 전개과정 및 4·3의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에 대한 주제 분류에 참고 하였고, 권귀숙의 연구는 4·3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기억을 분석하였는데, 4·3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을 세세하게 나누어 분석했기 때문에 이해집단에 대한 주제 분류에 참고 하였다. 양윤경 외 4명, 교회법,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의 논의는 4·3 민간단체의 4·3 규명 및 기념운동 동향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에 4·3의 규명 및 기념운동에 대한 주제 분류에 참고 하였다.

33) 4·3 평화재단의 기록은 신문기록 및 영상기록의 내용을 참고 하였으며, ‘주요인물’과 ‘위령 및 후속사업’의 주제 선정에 참고 되었다.

		치료, 기억의 전송
	4·3 추모식 및 위령행사	4·3 해원굿, 4·3추모식, 4·3 천도제, 4·3 위령 미사
	교육/견학	다크투어리즘, 교과서, 4·3 역사교실, 4·3 유적지 여행
	밭굴 및 유적/지역	유해 밭굴, 유적 밭굴, 유적 관리, 다랑쉬굴, 만벵티굴, 알뜨르비행장, 석알오름 학살, 잃어버린 마을
	4·3의 세계화와 평화 · 인권운동	평화 · 인권운동, 4·3의 세계화, 민간인 학살사건, 세계 평화의섬, 동아시아 평화운동, 소수자 인권, 민주화 이행기, 민주화와 과거청산

‘4·3의 배경’, ‘4·3의 전개’는 4·3의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한 시기로, 미국 수집정책, 대일교역통제, 4·28평화협상, 계엄령 등 매우 다양한 주제어가 속하며 공간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한국사회와 세계정세까지 고려해야한다. 이에 3·1절 기념식 발표, 3·10 총파업 등 주요 사건만을 선정하여 세부주제를 정하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들 역시 4·3의 배경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4·3사건 전과 4·3사건 전개는 세부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다.

‘4·3 이후’는 4·3진상조사 및 기념운동의 활동 분야별로 주제어가 정리되었다. 세부주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법/진상조사/관련 정책’은 정부의 진상조사 및 4·3정책에 대한 기록 및 민간단체의 진상조사와 4·3정책을 촉구 활동 기록에 대한 분류이다. ‘특별법/진상조사/관련 정책’은 자주 다루어지는 4·3연구 분야인데, 4·3에 대한 학술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80년대 말부터 특별법의 필요성이 논문에서 지적되었고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지적, 진상조사보고서의 분석 등이 학술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sup>34)</sup>

‘후속사업’은 정부의 4·3 추가진상조사와 4·3 기념사업을 주제로 한다. 4·3 학술 연구를 살펴보면 4·3위원회의 기념사업을 분석한 연구<sup>35)</sup>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기록을 살펴보면 4·3 위원회의 진상조사 이후에는 후속사업에 대한 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이재승, 200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법학』 25

임재홍, 부상일, 2003,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민주법학』 24

35) 고성만, 2008, 4·3위원회의 기념 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82

‘사건 피해 및 희생자 · 유족’은 4·3으로 인한 피해와 유가족의 보상에 대한 주제이다. 4·3 연구들을 보면 수형인 및 수형인 명부, 재판, 예비검속 피해자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sup>36)</sup>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3민간단체들의 토론회 자료를 통해서도 4·3민간단체들 내부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 · 보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37)</sup>

‘학술’은 학술행사 및 세미나 등과 관련된 분류이다. 4·3민간단체들 내부에서도 4·3의 추가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성과가 강조되고 있고<sup>38)</sup>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들 중에서도 신문기사나 영상을 통해 4·3세미나와 학술행사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학술은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학술행사에 대한 기록 및 연구<sup>39)</sup>가 확인되고 있다.

‘문화/예술/방송’은 4·3문학, 4·3공연, 4·3연극 등의 문화 활동과 4·3 다큐멘터리, 영화, 보도방송에 대한 분류이다. 문화/예술/방송에 대한 연구<sup>40)</sup>는 주로 4·3문학에 나타난 4·3 기억이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들인데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4·3문학도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4·3 문화와 예술은 트라우마 치료라는 측면이나 기억의 재현과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모식 및 위령행사’는 4·3을 기리고 기념하는 행사에 대한 주제이다. 4·3 학술 연구를 살펴보면 추모식과 위령제의 경우 해원상생굿과 위령의례의 의미에 대한 연구<sup>41)</sup>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기록을 살펴보면 추모식 및 위령제에 대한 기사가 4·3의 규명 및 기념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기사화된 것을 확인

36) 박찬식, 2012,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서대문, 마포, 광주형무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이경주, 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2

37) 양윤경, 박경훈, 허영선, 양동윤, 박찬식, 2016, 앞의 글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앞의 글

38)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앞의 글

39) 김영범, 2005, 앞의 연구

서승, 2004,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가능성-제주도의 역할, 『4·3과 역사』 4

40) 박미선, 2009, 4·3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현기영과 현길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유경, 최외선, 김갑순, 2011,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생애사와 미술 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 현해경, 2000,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굿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8

할 수 있다.

‘교육/견학’은 4·3의 전승 작업, 평화 · 인권 교육과 연관되는데 4·3연구<sup>42)</sup>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 및 교사의 4·3인식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교과서의 4·3 서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견학에 대해서는 주로 다크투어리즘을 연구한 논문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4·3 단체들의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체험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43)</sup>

‘밭굴 및 유적/지역’은 제주도 각 지역에 흩어진 4·3유적 및 학살지의 유해 밭굴, 각 지역의 학살에 대한 주제이다. 각 지역의 학살에 대한 기록이 4·3유적에서 어떤 학살이 있었는지와 연관있기 때문에 밭굴과 지역을 하나의 주제로 하였다. ‘밭굴 및 유적/지역’에 대한 연구<sup>44)</sup>는 2008년 유해 밭굴사업에 대한 연구와 유적지 및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4·3민간단체 내부에서는 잃어버린 마을의 밭굴과 마을단위 학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sup>45)</sup>

‘4·3규명과 민주화, 평화 · 인권운동’은 4·3 진상조사 및 기념운동에 대한 것으로 독재정권 시절 억압에 맞서 4·3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활동들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4·3민간단체들이 여러 민주화 단체들과 함께 교류한 것에 대한 기록과 평화 · 인권운동으로서 세계 여러 민간인 학살 관련 단체들과 교류한 것에 대한 기록의 분류이다. 4·3 연구들을 확인하면 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연구들과 4·3의 평화 · 인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4·3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확인 할 수 있다.<sup>46)</sup>

42) 현진호, 2007, 제주4·3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정근식, 2014, 4·3의 기억과 재현 그리고 다크 투어리즘, 『4·3과 역사』 13

43)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앞의 글

44) 고창훈, 고성만, 2006, 4·3희생자 유해밭굴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6

김태일, 2010,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濟州島研究』 34

45) 양윤경, 박경훈, 허영신, 양동윤, 박찬식, 2016, 앞의 글

46) 김영범, 2005, 앞의 연구

서승, 2004, 앞의 연구

### 3. 단체 및 인물별 주제 분류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주제 분류는 이덕구, 김달삼, 미군정, 인민유격대, 토벌대 등 4·3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관련이 높은 개인 및 단체와 4·3의 인 문형순,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 수형인, 여성, 후유장애인 등 4·3사건 이후 4·3의 규명 과 기념 운동 과정에서 주목 받은 개인 및 4·3관련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단체 및 인물별 주제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주제어
4·3 이해 단체	미군정/해외	미군정, 미곡수집정책, 대일교역통제, 미국, 미국자료, 4·3 진압정책, 3·1절 기념식 발포, 국제법
	우익단체	서북청년단, 서북기독교, 초토화작전
	좌익단체	남로당,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3·10 총파업, 3· 1절 기념식
	인민유격대	단선반대, 남로당
	한국 정부	한국정부, 계엄령, 초토화작전, 소개령
	토벌대(경찰 · 군인)	경찰, 군인, 초토화작전, 예비검속
주민	여성	여성, 인권
	디아스포라	재일제주인, 재일 4·3 문학
	수형인	수형인, 수형인명부, 군법회의 재판, 형무소
	피난민	피난민, 동굴
	소개민	소개민, 소개령
	선생 · 학생	선생, 학생, 뼈라, 해방 이후 교육
	아동	아동, 아동학살
	민보단	민보단
	주민생활	축성, 주거, 경제
인물	이덕구	이덕구, 인민유격대
	김달삼	김달삼, 인민유격대
	김익렬	김익렬, 토벌대
	문형순	문형순, 토벌대
	박진경	박진경, 토벌대
	진아영	진아영, 후유장애, 여성
	기타	한백홍, 현경호, 김성홍, 강계봉, 유해진

각 단체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4·3 연구 동향 및 주제어에 의해 선정되었다. ‘미군정’과 ‘인민유격대’, ‘좌익단체’는 4·3 연구<sup>47)</sup>들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체들이고, ‘한국정부’, ‘우익

단체', '토벌대'는 초토화작전, 예비검속, 소개령 등 국가 폭력과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sup>48)</sup>가 이루어 졌다.

‘주민’은 4·3당시 제주 주민들로서 4·3의 영향으로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계층이며 주로 4·3의 피해자들이다. ‘여성’, ‘디아스포라’, ‘수형인’, ‘피난민’, ‘소개민’, ‘선생 · 학생’, ‘아동’, ‘민보단’ 등이 있다. 이중 ‘여성’, ‘아동’은 연구자들에게 4·3 소수자로 언급되고 있으며<sup>49)</sup>, ‘수형인’, ‘피난민’, ‘소개민’은 4·3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다. 특히 4·3의 규명과 기념 운동 과정에서 수형인들의 희생자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수형인에 대한 연구<sup>50)</sup>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보단’은 4·3 당시 제주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시사,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sup>51)</sup>들 또한 증가하였다. 한편 ‘디아스포라’의 경우 4·3을 피해 도일한 재일제주인들인데 4·3 이후 4·3 문학 활동을 활발히 진행한 집단이다. 이에 4·3연구를 확인해보면 그들의 경험 및 생활에 대한 연구<sup>52)</sup> 외에도 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sup>53)</sup>들이 다수 존재한다.

‘인물’은 제주4·3평화재단 소장 기록과 4·3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상징적인 인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고려하여 이덕구, 김달삼, 김익렬, 문형순, 박진경, 진아영으로 분류를 선정했다. 이 중 특히 김익렬과 문형순은 4·3의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4·3 규명 및 기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4·3 단체 내부에서 4·3의인기념활동의 필요성이 언급<sup>54)</sup>되고 있으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기록에서도 4·3의인 관련 기사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진아영의 경우 4·3의 대표적 후유

47) 양정심, 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의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7

양정심, 2007, 4·3항쟁과 남로당 제주도당, 『수선사학회』 27

48) 김평선, 2010,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 분석: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10

49) 염미경, 2017,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화, 『4·3과 역사』 17

허영선, 2007,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 4·3시기 아동학살 유형과 특징 『탐라문화』 30

50) 박찬식,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 『4·3과 역사』 1

51) 이그나즈 아니타, 2016,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4·3과 역사』 16

52) 함한희, 2010, 증언, 생활사, 구술사: 기억의 구술과 역사 4·3의 경험과 재일제주인, 그리고 한국현대사

53) 김환기, 2006, 재일 4·3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日本學報』, 69

54)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앞의 글

장애인으로 4·3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후유장애인과 4·3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4·3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4·3 평화재단의 영상기록과 신문기록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기록들을 확인 할 수 있다.

## 제2절 4·3기록의 주제별 존재양상

### 1. 시기별 기록의 특징

#### 1) 4·3의 배경

세부 주제별 기록의 형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의 배경’에 속하는 기록은 총 884건이 있으며, 기록의 유형은 ‘자료집’ 14건, ‘기타 단행본’ 2건, ‘해외수집자료’ 25건, ‘기록영상’ 1건, ‘증언영상’ 23건, ‘유물사진’ 1건, ‘신문자료집’ 818건이다.

‘자료집’은 주로 신문과 잡지의 내용을 모은 자료집인데, 신문 자료집 ‘현대사자료총서’와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그리고 미군정 시절 작성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이 있다. ‘현대사자료총서’는 『한성일보』, 『조선일보』, 『독립신보』, 『해방일보』, 『청년해방일보』의 신문기사 모음으로 46-47년까지 생산된 기사들이 모아져 있다. ‘한국사 현대사 자료총서’역시 1945-1947년 사이 발행된 신문기사와 잡지의 내용 중 4·3관련 내용만 추려 정리한 것으로 1-5권은 『한성일보』, 『조선일보』, 『독립신문』 등의 신문 기사를 6-15권은 『개벽』, 『과학전선』 등의 잡지에 실린 글을 편집한 것으로 4·3위원회가 4·3진상조사과정에서 신문과 잡지기록을 수집하여 만든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속기록’은 미군정 시절 앞으로 수립될 한국정부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회의의 속기록이다. 공포된 법률은 11건, 심의한 법률 50건에 지나지 않지만<sup>55)</sup> 4·3 당시 있었던 법률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기타 단행본’의 경우 ‘한국전쟁사’와 김익렬의 실록유고가 존재한다. 한국전쟁사는 국방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집으로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한국

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정부 수립까지 한국 현대사에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4·3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김익렬 연대장은 4·3 당시 4·28협상을 주도했으며 4·3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김익렬 장군 실록유고’는 김익렬 연대장이 기존의 4·3 기록들은 왜곡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9연대장으로 제직중에 겪은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김익렬 연대장은 원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작고하였으며 이에 ‘김익렬 장군 실록유고’는 기록 내용에 의하면 친필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맞춤법과 한자의 한글표기 등 기초적 교정만 수행한 후 세상에 나왔다. ‘김익렬 장군 실록유고’는 4·3의 배경과 미군정의 대응을 밝히는 중요기록으로 그 가치가 높다.

‘해외수집자료’의 경우 미국의 합동정보연구위원회 (Joint Intelligence Study Publishing Board, 이하 JISPB)에서 1945년 생산한 한반도의 정치·경제·지리·군사시설 관련 기록과 영국 영사관의 3·1절 기념식 사건에 대한 보고서 기록 등 원본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기록영상’은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영상 1건이 존재하며, ‘증언영상’은 일제강점기와 3·1절 기념식, 3·10총파업, 4·3 직전 제주도에 분위기에 대한 구술 증언 기록이 존재한다.

‘유물 사진’은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 1건 존재한다. ‘신문자료집’의 경우 1945년부터 1947년 사이 보도된 기사는 760건으로 4·3이 일어나기 전 한반도 및 제주도의 정치와 경제상황 그리고 미군정의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부터 2015년까지 4·3의 배경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역시 51건 존재한다. 1960년대 이후 발행된 기사들의 경우 4·3이 마무리된 이후 4·3의 배경에 대하여 밝혀진 것들로 주로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나, 3·1절 기념식 사건과 3·10 총파업의 의미 그리고 당시 미군정의 대응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 2) 4·3의 전개

다음으로 ‘4·3의 전개’이다. 기록 양은 총 3,734건이며, 기록 유형은 ‘자료집’ 12건, ‘기타단행본’ 1건, ‘보고서’ 1건, ‘해외수집자료’ 8건, ‘기록영상’ 4건, ‘증언영상’ 69건 ‘유물사진’ 1건, ‘신문자료집’ 3,639건이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자료집’과 ‘기타 단행본’의 경우 ‘계엄법/해안경비법/국방경비법’, ‘김익렬 연대장 국제신문기고문’, 4·3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위



해 기록을 모아 정리한 ‘한국전쟁사료’, ‘제주4·3사건자료집’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사료’와 ‘제주4·3사건자료집’의 경우 국내 신문, 정부의 속기록, 군·경의 작전명령 및 보고서, 미군정의 보고서, 맥아더 극동군 사령부 정보국G-2의 정기정보보고 등의 기록 중 4·3관련 기록을 모은 것으로 4·3의 전개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외수집자료’는 주로 영국 영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에서 모은 기록으로 5·10선거에 관한 기록과 6·25전쟁 관련 기록이 있으며 ‘보고서’는 1건이 있으며 정부에서 1955년 제주도민들의 피해상황과 난민에 대한 조사를 한 보고서이다. ‘기록영상’은 4건으로 ‘May Day In Cheju-do’를 제외하고 모두 4·3 이후 진상조사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모두 초토화 작전의 지시와 그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기록이다.

‘증언기록’은 4·3발발, 5·10선거, 오라리 방화사건, 계엄령, 소개령 초토화 작전, 예비검속 등 주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들의 기억을 구술채록한 기록이다. 한편 ‘유물사진’은 1건으로 토벌대가 잡은 포로와 귀순자의 이송 문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복사본을 만든 기록이다.

‘신문자료집’은 3,639건 중 3,451건이 1948년 4·3 발발부터 1957년 마지막 인민유격대원이 사살·생포 될 때까지 생산된 기사이며, 188건은 그 이후 4·3 진상 규명이 시작 되면서 기사화된 기록들이다. 4·3 당시 생산된 기사들은 주로 4·3 당시 한반도의 상황과 미군정 및 토벌대의 활동 그리고 인민유격대의 습격을 다루고 있다. 주요사건은 5·10선거,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 계엄령, 선무공작 등에 대한 기사가 존재하며, 주민들의 피해와 수용소의 환경, 이재민들에 대해 다룬 기사도 102건 존재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의 구호와 물자공급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며, 정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시 있었던 언론통제 때문으로 보인다. 4·3 당시 4·3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심하면 연행되기도 했으며, 초토화 작전 이후에는 사전 검열을 실시해 언론을 통제하였다.<sup>56)</sup> 4·3 이후 생산된 기록 188건 중 133건은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로 초토화 작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경험을 마을별로 연재하였다. 그 외에는 주로 계엄령의 불법성과 예비검속 당시 학살, 초토화 작전의 진상에 대한 기사들이다.

56)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앞의 책, 292쪽

### 3) 4·3 이후

#### (1) 특별법/진상조사/관련정책

다음으로 ‘4·3 이후’ 시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진상조사/관련정책’에 대한 기록이다. 기록의 양은 총 3,330건으로 ‘자료집’ 1건, ‘보고서’ 5건, ‘재판기록’ 5건, ‘문서’ 4건, ‘포스터’ 6건, ‘기록영상’ 29건, ‘방송/영화’ 11건, ‘증언영상’ 3건, ‘재단간행물(단행본 5건, 보고서 3건, 세미나 1건)’ 9건, ‘신문자료집’ 3,257건이 있다.

그 내용은 기록영상과 ‘방송/영화’ 그리고 ‘증언영상’은 「4·3 특별법」의 국화 통과에 대한 영상기록이나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 등을 기록하거나 보도한 영상이다. ‘재판기록’은 우익단체의 헌법소원 결과로, 우익단체는 4·3위원회의 수형인의 희생자 인정이 헌법 위반이라 주장했지만 전부 각하되었다. ‘문서’는 제주4·3연구소 등 민간단체의 기록으로 2003년 특별법 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제주4·3연구소의 의견을 조사한 문서와 4·3진상조사 보고서 확정결과에 대한 문서 등이 있다. ‘재단간행물’은 4·3 인식 조사, 4·3해결 과제 등에 대한 보고서와 4·3 국가기념일 제정관련 세미나 기록들이다. ‘신문자료집’의 경우 4·3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특별법 제정과 진상 조사, 우익단체의 진상조사반대 활동,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의 4·3 후속 정책, 정치계 주요 인사들의 4·3정책과 관련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이 있다.

‘특별법/진상조사/관련정책’의 기록들은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기록이 특히 잘 보존 되어 있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4·3정책관련 기사들을 시간 순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며 4·3민간단체들, 우익단체들, 정부 등 4·3진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3 특별법」 및 4·3정책과 관련된 각각 단체 내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이는 각각의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신문기록이나 방송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관련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활동 기록은 소장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4·3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계획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 기록, 희생자 신고와 희생자 심사과정의 기록 등 공공기관들의 활동 기록과 4·3민간단체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쫓겨대회 등의 단체 내부에서 작성된 활동기록의 수집이 필요하다.

## (2) 후속사업

다음으로 ‘후속사업’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사업에 대한 기록은 총 884건이며, 문서 1건, 기록영상 11건, 방송영화 4건, 홍보영상12건, 행사사진 4건, 음악/라디오 2건, 신문자료집 765건, 재단간행물(교육 18건, 단행본 17건, 보고서 1건, 세미나 5건, 일반 7건, 정기간행물 30건, 행사 4건) 82건이 존재한다. 기록을 기록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정부의 4·3 사업 관련 기록 예시

내용분류1	내용분류2	형태분류 (건)	기록 예시	합계
평화재단 기념사업	4.3교육	교육(18)	4·3문화해설사 보수교육(2013)	21
		단행본(3)	제주4.3바로알기-영어	
	정기간행물 발행	정기간행물 (30)	4·3과 평화-1호	30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음악 /라디오(2)	재판과 형무소-4.3평화기념관 4관 죽음 의 섬 음향	21
		기록영상 (8)	4·3 위령공원 조성계획 회의	
		방송 /영화(3)	상생의 바람, 평화의 물결 4·3 공원	
		홍보영상 (8)	4.3평화기념관 2관 흔들리는섬-3.1발포 사진(애니메이션)	
	시상사업	행사(2)	제2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자료집	8
		기록영상 (2)	2003년 4·3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홍보영상 (4)	제1회 4.3평화상 참석자 명단	
	문화· 예술 사업	단행본(14)	전국청소년 4·3문예 공모 입상작품집- 제13회(2012)	23
		일반(7)	제68주년 4·3 초대전-평화, 슬픔에 핀 소망의 꽃-초대장(2016.3.25-5.31)	
		행사(2)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4·3문예백일 장 작품상 시상식 자료집(2015)	
	학술사업	세미나(5)	4·3평화포럼-1회(2011), 제주4·3연구 및 평화교류의 확산	6
		기록영상	제4회 제주평화포럼 노무현대통령 오	

	기타	(1)	찬간담회	6
		보고서(1)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	
		행사사진 (4)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제4·5대 이문교 제6대 양조훈)이·취임식	
		방송/영화(1)	4·3공청회 "4·3위령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KCTV 중계방송	
기타 공공기관		문서(1)	4.3문제해결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1
보도		신문자료집 (768)	'4.3평화공원' 하반기 추진 4.3 장한어머니상	768
합계				884

우선 ‘신문자료집’을 제외한 116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116건 중 115건이 제주4·3평화재단의 기념사업 관련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기념사업은 4·3교육, 정기간행물 발행,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운영, 시상 사업, 문화·예술 사업, 학술사업이 있다. 4·3교육은 4·3시민아카데미,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전국 청소년 4·3평화캠프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사업에서 사용된 교제 및 판플렛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평화재단의 정기간행물 ‘4·3과 평화’의 발행 기록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30호 분량의 간행물이 소장되어있다. ‘4·3과 평화’의 내용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한 기념사업 및 행사의 소식, 4·3 작품의 소개, 4·3관련 칼럼과 인터뷰, 유적지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4·3평화공원 관련 기록은 4·3 평화공원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기념공원의 시찰, 위령공원의 조성계획, 제주도민공청회, 공사현장에 대한 영상 기록과 4·3평화공원과 4.3기념관에서 전시 콘텐츠 기록이 소장되어있다. 다음으로 시상사업관련 기록은 4·3평화상과 장한 어머니상 관련기록이 소장되어 있는데, 시상식을 녹화한 영상과 수상자 프로필영상, 행사 판플렛 기록이 소장되어 있다. 문화·예술 사업은 문예공모, 백일장, 특별 전시회의 기록이 있는데 문예공모 및 백일장 수상자들의 작품집과 전시회 도록 그리고 판플렛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사업 기록은 4·3평화포럼 1-7회의 세미나 자료집이 있는데 발표 및 토론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4·3의 세계화와 평화·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행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인사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문자료집’의 기록 내용은 첫째, 제주4·3평화재단 설립과 운영 및 4·3평화공원의 조성사업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보도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주로 예산 축소로 인한 4·3관련 사업의 어려움, 사업의 축소 및 인력에 대한 갈등,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기사이다. 둘째, 후속사업운영관련 기사들이 확인된다. 제주4·3평화재단의 교육 사업 및 문화 사업의 시행에 대한 보도기사들로 4·3평화상, 4·3문학상, 4·3문예공모 및 백일장의 실시와 수상자들의 인터뷰 등에 대한 기사,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4·3평화재단의 장학사업 등에 대한 기사가 있다.

### (3) 사건 후유증 및 희생자 · 유족

다음으로 ‘사건피해 및 희생자 · 유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922의 기록이 있으며 ‘재판기록’ 3건, ‘자료집’ 1건, ‘기록영상’ 18건, ‘방송/영화’ 14건, ‘증언영상’ 71건, ‘보고서’ 1건, ‘유물사진’ 4건, ‘신문자료집’ 809건, ‘포스터’ 1건이 있다. 기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희생자 유족 및 사건 후유증 관련 기록의 예시

내용분류	기록 형태	기록 예시	합계
보도기록	신문자료집(809)	4·3희생자 유족 집단소송 움직임	809
수형인 · 예비검속	자료집(1)	6.25당시 피살자명부	62
	기록영상(5)	군사재판에 대한 인터뷰(양금석)	
	방송/영화(10)	제주MBC 4·3증언 나는 말한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 그 흔적을 찾아서’ 방송 영상	
	증언영상(43)	대구형무소 수형인 증언(강창협)	
	재판기록(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의결행위 등 취소(2000헌마238, 2000헌마302)	
후유장애인	기록영상(8)	고산월, 진아영할머니	23
	방송 · 영화(4)	4·3후유장애인 3부작 ‘1부 - 몸에 새긴 4·3의 고통’	
	증언영상(11)	후유장애 (고윤섭)	
연좌제, 수장	기록영상(2)	대마도 4·3수장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18
	증언영상(16)	수장 증언(가와찌)	
기타	보고서(1)	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황조사) 1955	10
	기록 영상(3)	4·3 희생자(양인순할머니 남편) 제사 1편	

	증언영상(1)	행방불명(좌인원)	
	유물사진(4)	사진-21(이종우)	
	포스터(1)	4·3피해신고 1차 포스터	
합계			922

우선 ‘신문자료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희생자의 심사와 유족의 보상에 대한 우익단체의 반발과 유족단체의 항의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희생자 심사와 유족 보상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수형인과 후유장애 그리고 예비검속 피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 내용은 희생자들의 증언 보도,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사, 우익단체 및 우익인사와 4·3유족회의 마찰 및 재판, 4·3유족회의 진상조사 촉구 활동 등이 있다. 한편 ‘구술증언’, ‘방송/영화’ 등 다른 형태의 기록에서도 수형인, 후유장애인, 예비검속 피해자 등을 다룬 기록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문자료집’기록의 내용을 보아 수형인, 후유장애인, 예비검속 피해자 등이 큰 이슈가 된 만큼 많은 기록이 생산되고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형인에 대한 기록은 주로 수형된 이유와 형무소의 생활에 대한 희생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형인들이 받았던 군사재판에 대한 증언 기록들이다. 이중 특히 군사재판에 대한 증언은 재판결과가 합법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한편,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이 4·3과 겹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형인이 되거나 학살을 당했는데 이에 예비검속에 대한 증언기록도 많이 생산되었다. 그 내용은 예비검속을 당한 사연, 예비검속으로 수감된 가족의 죽음, 예비검속 수형인의 재판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후유장애인에 대한 기록 역시 주로 증언기록으로 후유장애를 겪게 된 원인에 대한 증언 기록, 후유장애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방송기록 등이 확인된다. 또한 후유장애의 상징적 인물인 무명천할머니 진아영에 대한 기록영상과 방송기록 또한 소장되어 있다. 후유장애인에 대한 기록 역시 후유장애인 보상 문제가 4·3 규명 운동의 큰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양한 증언과 기록이 생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연좌제와 수장피해에 대한 증언 및 연좌제에 대한 방송 영상 기록이 있고 4·3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 대한 피해상황 조사 문서가 1건이 있으며, 희생자 결정에 대한 우익단체의 소송에 따른 헌법 재판소 판결문이 있다.

‘사건 피해 및 희생자·유족’ 기록의 경우 희생자의 경험에 대한 기록, 희생자 결정과정의 갈등에 대한 기록 등 4·3의 희생자 인정과 보상의 맥락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유족들의 활동은 신문기록 외에 다른 형태의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공공기록의 경우에도 희생자 신고서 및 희생자 심사에 대한 기록이 소장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희생자 선정 활동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족활동에 대한 기록 수집 및 서비스가 필요하며, 공공기록이 경우 기록의 대부분이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 비공개 기록이지만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얻어 기록의 목록을 제공하는 등 기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4) 학술

‘학술’과 관련된 기록은 289건으로 ‘자료집’ 7건, ‘기록영상’ 4건, ‘포스터’ 5건, ‘재단간행물’ 5건 그리고 ‘신문자료집’ 268건이 있다.

이 중 ‘포스터’와 ‘기록영상’은 학술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와 학술대회의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 기록이며, ‘재단간행물’은 제주4·3평화재단이 4·3 후속사업으로서 매년 진행한 4·3평화포럼의 1-3회, 6-7회의 기록이다. ‘신문자료집’의 경우 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알리는 기사나 학술대회 개최 소식에 대한 기사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알리는 기사의 경우 여성, 잃어버린 마을, 4·3의 진상조사,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학술적 논의에 대한 기사가 확인되고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기사는 국내 학술 대회와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소식이 많은 것은 4·3의 세계화, 평화·인권운동의 일환으로써 국제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 (5) 문화/예술/방송

‘문화/예술/방송’과 관련된 기록은 총 1,729건으로 ‘기록영상’ 10건, ‘문화/예술’ 25건, ‘방송/영화’ 143건, ‘홍보영상’ 9건, ‘음악/라디오’ 12건, ‘포스터’ 64건, ‘재단간행물’ 25건, 마지막으로 ‘신문자료집’ 1,441건이 있다.



이 중 ‘기록영상’, ‘문화/예술’ 기록은 4·3 공연과 예술 행사를 직접 촬영한 영상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주로 4·3전야제, 놀이패 한라산의 연극, 음악회 등을 촬영한 영상이다. ‘방송/영화’와 ‘음악/라디오’는 주로 영화, 방송 영상, 라디오 기록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생산된 기록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도영상이 있다. 드라마는 ‘라디오 드라마 10부작 한라산’이 있으며, 그 내용은 4·3의 전 과정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다큐멘터리는 후유장애인, 수장피해자, 수형인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제작된 특집 방송과 각 마을 별 4·3 당시 희생자들의 증언을 방송한 ‘4·3 증언 나는 말한다’가 있다. 보도 영상은 4·3공청회, 다랑쉬굴 장례식 등의 현장을 생방송으로 방송한 영상이다. 영화의 경우 대표적으로 ‘레드헌트1,2’가 있다. ‘레드헌트’는 발표 당시 감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논란이 된 영화로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4·3 책임을 묻고 있다. 1편에서는 주로 4·3의 배경이 된 3·1절 발표와 3·10총파업 그리고 4·28 협상에서의 정부의 대응을 2편에서는 수형인들의 수형경험과 4·3 이후 그들의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홍보영상’과 ‘포스터’는 4·3 전야제와 4·3 연극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와 영상이다.

다음으로 ‘재단간행물’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시행한 문화·예술 행사 관련 기록이다. 주로 4·3 문예 공모전, 학생 4·3백일장, 4·3 기념관에서 시행된 4·3 미술 전시에 대한 기록으로 작품집과 도록, 판플렛으로 전시와 공모전 작품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자료집’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1980년대 후반 6월 민주항쟁 이후 4·3관련 문학작품의 발표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는 재일제주인들의 작품활동 또한 눈에 띈다. 또한 90년대 초부터는 강요배의 그림 전, 연극 ‘붉은섬’ 등을 시작으로 4·3 예술과 연극에 대한 기사가 증가한다. 90년대 중반에는 제주민예총을 중심으로 4·3예술제의 시작에 대한 기사가 확인되고 이후 4·3예술제가 매년 진행된다. 또한 4·3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자 언론사에서는 예술·문학작품에 대한 특집기사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말에는 ‘레드헌트’ 4·3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며 신문에 현길언의 소설 『한라산』이 장기 연재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 4·3문학 공모전과 관련된 기사들이 증가 했으며, 4·3 문학의 고전인 ‘순이삼촌’의 영화화, 장일홍의 4·3 희곡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의 뮤지컬화 등 문화의 재생산에 대한 기



사들이 확인된다. 그런 한편 문화·예술을 통한 4·3 세계화에 대한 기사 보도가 증가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 주목할 만한 보도는 4·3영화 ‘지슬’의 발표와 상영 그리고 수상에 대한 기사들이다. 4·3 영화 ‘지슬’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선댄스 영화제, 이스탄불 영화제, 프랑스 블줄국제아시아영화제 등에서 수상했음이 보도되었다.

문화·예술관련 기록들은 4·3 문화·예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으며, 신문 기사를 통해 4·3 규명운동의 일환으로서 문화 예술운동의 전개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록이 연극과 예술·문화 행사와 제주4·3평화재단의 전시기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문학, 미술, 음악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이에, 다양한 4·3 예술·문화에 대한 기록의 제공과 수집이 필요하다. 4·3 예술·문화는 4·3 규명 운동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4·3을 알리고 후대에 4·3을 교육하고 4·3의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문화·예술 관련 기록들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기록 수집과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기록 자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용자들이 4·3 문화·예술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접근 방법을 제시하거나 목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6) 4·3 추모식 및 위령행사

추모식 및 위령행사에 대한 기록은 총 819건으로 ‘문서’ 2건, ‘기록영상’ 45건, ‘방송/영화’ 6건, ‘행사사진’ 1건, ‘재단간행물(단행본)’ 1건, ‘포스터’ 8건, ‘신문자료집’ 756건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서’, ‘기록영상’, ‘방송영화’, ‘행사사진’, ‘포스터’는 모두 위령행사 및 추모제의 진행과정의 기록이다. ‘문서’는 위령제의 행정 기록으로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 봉행 위원회’ 추대 문서와 ‘만병디 공동묘역 위령제’ 초청장이고, ‘포스터’는 추모식을 홍보하는 기록으로 41주기, 43주기, 44주기, 49주기, 50주기, 69주기 추모식 포스터가 있으며, 학술세미나, 유적지 순례, 추모제, 예술제 등 추모식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일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

‘기록영상’과 ‘방송/영화’는 4·3위령제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거나 위령

제를 중계방송한 기록인데, 4·3추모식 관련 기록이 기록영상과 방송기록 함께 53건 중 33건으로 가장 많지만 그 외에 수장희생자 위령제, 백조일손위령제, 화북 곤을동 위령제 등 다양한 지역과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의 영상도 존재한다. 특히 방송기록의 경우 8건 중 7건이 모두 수장희생자 위령제 영상이다. 수장희생자에 관한 위령제 영상은 2002년에 제작된 방송 기록이 특히 많은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수장희생자에 대한 4·3규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문기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행사사진’과 ‘재단간행물(단행본)’은 희생자 추념식 사진인데 ‘행사사진’은 69주년 희생자 추념식의 사진이고 ‘재단간행물(단행본)’은 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이를 기념하기위해 역대 추념식의 사진을 모은 사진집이다.

다음으로 ‘신문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4·3추모식 관련 기사와 지역별 · 희생자 집단별 위령제의 개최기사가 있다. 4·3추모식 기사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추모식 때 4·3의 해결을 촉구하고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같이 진행되었다가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4·3의 국제화, 평화 · 인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국제적인 축제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모제 행사 진행에 대한 기사들을 확인하면 추모제가 단지 영령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예술제, 청소년문화제, 학술행사들과 함께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모제를 맞이하여 4·3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4·3단체의 신문기고와 정치인들의 발언관련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4·3추모제는 4·3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면서 동시에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4·3추모식 이외에도 타지에서 생을 마감한 수형인과 수장희생자들, 집단학살을 당한 예비검속 피해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위령제와, 종교계의 추모미사와 천도제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단위 집단단위 위령제나 종교계 행사 기록은 4·3추모식에 비해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양이 적다. 4·3추모식의 경우 그 행사모습이 영상기록이나 방송기록으로 남아 있고 관련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며 행사 일정이 포스터로 남아있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 단위의 작은 위령제나 종교계의 추모미사 및 천도제에 대한 기록은 신문기사 외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 행사의 모습이나 진행을 확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4·3추모식의 경우에도 추모식 기획회

의나 계획 등과 관련된 기록 없이 위령제 영상기록 및 방송기록 등만 보존되어 있어 위령행사 관련 활동 맥락 확인이 어렵다.

#### (7) 교육/견학

다음으로 ‘교육/견학’ 기록은 603건으로 ‘기록영상’ 9건, ‘포스터’ 6건, ‘재단간행물(행사1건 교육 18건)’19건 ‘신문자료집’ 569건이 존재한다.

그 내용은 ‘신문자료집’의 경우 우선 교과서의 4·3 용어 및 서술 논란에 대한 기사들이 있다. 교과서의 4·3 표현 논란은 교과서 개정 때마다 등장했는데, 4·3이 항쟁인지, 사건인지, 폭동인지에 대한 용어의 선택과 4·3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기사들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고문 및 칼럼들이 작성되었다. 이외에는 제주4·3연구소, 4·3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진행하는 교육 및 체험학습, 4·3유적지 순례, 특별 강연에 대한 소식을 담은 기사 그리고, 4·3관련 교육계의 활동 기사가 있다. 특히 제주4·3연구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4·3역사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유적지 역사 여행 등 체험학습을 통해 4·3 교육을 꾸준히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 활동에 대한 기사는 4·3교육주간 선포, 4·3교육을 위한 교육 세미나, 4·3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행사 등을 보도하는 기사가 있다.

다음으로 ‘재단간행물’을 살펴보면 제주4·3평화재단의 4·3 교육 사업으로 시민 4·3아카데미, 전국교원 4·3직무연수 등의 교육과 체험학습에서 쓰인 교제와 판플렛이 소장되어 있으며, ‘기록영상’은 4·3 유적지 견학 및 답사를 기록한 기록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스터’는 제주4·3연구소의 4·3 역사교실, 4·3 유적지 순례, 제주사회문화협회의 4·3문화학교 등의 교육 행사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이다. 그리고 기록영상은 4·3 유적지 견학 및 답사를 기록한 기록영상이 있다.

(8) 발굴 및 유적/지역

‘발굴 및 유적/지역’의 기록 양은 1,176건으로 기록 형태는 ‘기록영상’ 27건, ‘방송/영화’ 97건, ‘증언영상’ 46건, ‘기타 단행본’ 2건, ‘보고서’ 1건, ‘기록사진’ 433건, ‘유물사진’ 5건, ‘문서’ 2건, ‘신문자료집’ 563건이 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나누면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4> 발굴 및 지역 관련 기록의 예시

내용분류1	내용분류2	형태분류	기록 예시	합계
발굴 및 유적	제주공항	기록사진 (433)	제주공항 1차유해발굴 현장조사	459
		기록영상 (1)	4·3희생자(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영상 보고서	
	현의합장묘	기록영상 (8)	현의합장묘 4·3희생자 유해발굴	
	다랑쉬굴	기록영상 (6)	다랑쉬굴 유골 화장 및 장례식	
		방송·영화(2)	다랑쉬굴 유골 발견 / 화장 / 장례식 방송 영상	
	기타	기록영상 (4)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1단계(화북지역) 영상보고서	
		유물사진 (5)	나무창	
유적 및 학살 증언		증언 영상(46)	북촌학살 증언(김근식)	205
		기타단행본(2)	4·3은 말한다 6권 1	
		방송·영화(91)	4·3증언 나는말한다 1편 - 초토화의 광풍 "안덕면 동광리"	
		신문자료집(66)	4·3은 말한다 <359> 초토화 작전 - 朝天面 新興理 - 11월 잇단 공방전 희생속출, 강경작전에 청년들 줄이어 피신입산, 「도피자가족」 지목해 노약자 집단 학살 보도일자 : 1월 10일	
조사		보고서 (1)	제주4·3사건당시 잃어버린 마을 실태조사 현황	1
보도		신문 (497)	다랑쉬굴 ‘4·3 유골’ 합동 장례	497

기타	문서(2)	4:3자료 및 유물수집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에 따른 보조금 교부	14
	방송·영화(4)	제주MBC 일요리포트 제주4·3기획 '잃어버린 故郷(고향)'	
	기록영상(8)	4·3 유물전편	
합계			1,176

<표 24>에서처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해 발굴 활동 및 유적 기록이 있다. 457건으로 제주공항, 현의합장묘, 다량쉬굴, 박성내, 화북동, 목시물굴의 발굴 및 유적 기록이 있다. 그 중 434건이 제주공항 1,2차 발굴기록으로 '기록사진' 433건과 '기록영상' 1건이 있다. 그 내용과 구성은 4·3위원회의 유해 발굴 추진 체계에 따라 현장 조사, 유해발굴, 유가족 채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현의합장묘 유해발굴 및 이장 기록이 '기록영상'으로 8건 있으며, 다량쉬굴 유골 발견 및 화장기록이 '기록영상' 6건, '방송/영화' 2건이 있다. 그 외에는 화북지역 유해발굴 사업 기록영상 2건, 발이오름 기록영상 1건, 박성내 유적 기록영상 1건, 목시물굴에서 발견된 유물의 사진이 2건이 있고, 출처가 기록되지 않은 유물로서 방송 촬영 중 발견한 유물의 사진이 3건 있다.

위와 같이 유해 발굴 활동 및 유적의 기록은 제주공항의 발굴기록이 가장 많은 양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4·3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이 전부 발굴활동의 과정을 담은 사진 기록으로 발굴결과 보고서, 유해발굴 계획서 등의 발굴활동의 맥락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유적 및 지역별 학살에 대한 증언 기록이 있다. 205건의 기록이 존재하며 '증언영상' 46건, '기타단행본' 2건, '방송/영화' 91건, '신문자료집' 66건이 있으며, 만병디굴, 북촌리 학살, 빌레못굴 학살, 비행장학살, 하귀리 학살 등 제주도 전 지역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증언을 각각의 마을 및 장소를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다. 증언 기록은 각 지역별로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는지 보여주며 특히 학살 유적지에서 어떠한 학살 상황과 정황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기록이다.

셋째, 유해 발굴 및 유적과 관련된 보도이다. '신문자료집' 497건이 속하

며 그 내용은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보도,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 실태 그리고 예산 관련 기사, 4·3 유적을 소개하는 특집기사, 4·3유적지의 현장 체험학습관련 기사, 각 지역 유적지에서의 추모 기사 등이다.

그 외의 14건의 기록은 유적관련 다큐멘터리와 특집 방송 기록과 유적 발굴 보조금 교부 문서와 만병덕 공도묘역 위령제 초청장 같은 제주4·3연구소의 문서, 유적답사 기록영상, 4·3 유물 전 전시회 기록영상 등이 있다.

#### (9) 4·3의 세계화와 평화 · 인권운동

다음은 ‘4·3의 세계화와 평화 · 인권운동’ 관련된 기록이다. 관련 기록은 589건이며, ‘포스터’ 8건, ‘문서’ 1건, ‘기록영상’ 4건, ‘방송/영화’ 2건, ‘홍보영상’ 6건, ‘해외수집자료’ 1건, ‘신문자료집’ 566건이 있다.

‘신문자료집’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학살과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과 부당한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4·3의 가치를 세계 평화와 인권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28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 노근리 사건 등 4·3처럼 권력과 폭력에 희생된 사건 관련단체들과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외의 4·3 소개 및 4·3관련 강연, 세계 평화의 섬 지정으로 4·3 세계화가 구체화되었음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문자료집’ 외의 다른 기록들의 경우 평화 와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 및 4·3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문화 행사 기록으로서는 4·3 국제 평화 마라톤에 대한 기록영상과 홍보 포스터, 평화 인권 마당국제 의 포스터, 세계섬 학술 회의의 홍보 포스터 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에는 다른 인권 유린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및 해외수집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베트남 마라이 학살사건, 5·18민주화 운동, 2·28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 외에는 4·3을 해외에 알리는 홍보영상으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만들어진 기록과, 5·18 관련 행사의 포스터 및 기록 영상이 남아 있다.

## 2. 단체 및 인물별 기록이 특징

### 1) 미군정/해외

다음으로 4·3관련 집단 및 주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미군정/해외’이다. 기록의 양은 전체 376건이며 형태별로 ‘자료집’ 5건 ‘기타단행본’ 2건 ‘해외수집자료’ 136건 ‘신문자료집’ 233건이 해당된다. 그 중 미군정과 관련된 기록은 364건으로 ‘미군정/해외’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내용을 보면 4·3 전개 당시 생산된 기록과 4·3규명 및 기념 운동 당시 생산된 기록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4·3전개 당시 생산된 기록은 ‘해외수집자료’와 ‘자료집’, ‘신문자료집’의 기록 일부가 있는데, 당시 한반도의 상황과 미군정의 대응에 대한 기록이다.

우선 ‘해외수집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의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반도의 전체적인 환경과 지리, 정치, 경제 등을 조사한 보고서로 19건 존재한다. 둘째, 한반도에 있는 특정 사건 및 단체에 대한 조사·보고 문서이다. 주로 한반도의 공산당에 대한 조사, 5·10선거 및 3·1절 기념식 발포, 여순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보고하고 있는 문서로 93건이 있다. 셋째, 외국의 신문기사이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기사로 15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해외수집자료’의 경우 대부분이 미군정 및 해외의 여러 나라가 한반도의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이며, 4·3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군정 내부에서 4·3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정책을 시행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다.

‘자료집’의 경우 ‘제주 4·3사건 자료집(미국자료편)’과 ‘한국사 연구’에 해외 및 미군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해외수집자료’와 마찬가지로 미군정 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제주 4·3사건 자료집(미국자료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4·3의 진행과 4·3당시 어떤 지서가 습격을 당했고, 유격대 몇 명이 사살되고 몇 명이 잡혔는지 등 4·3의 전개과정과 유격대와의 교전 상황에 대한 일일보고와 주간보고 등 보고서와, 어떤 부대가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보고서 및 작전일지가 주된 기록이다. 미군정의 4·3 대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군에



내려진 명령이나 수뇌부 기록은 확인이 어렵다.

‘신문자료집’의 경우 해방이후 미군정의 정책과 4·3 당시 미군정의 대응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소장되어 있다. 3·1사건 및 5·10선거에 대한 미군정의 발표, 해방이후 미군정의 정책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3 이후 4·3 규명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54건 존재하는데 대부분 신문기사로 미군정 책임에 대한 보도기사와 기고문들이다.

## 2) 우익단체

‘우익단체’에 대한 기록은 55건으로 ‘자료집’ 1건 ‘증언영상’ 19건 ‘신문자료집’ 35건이 존재한다. 우선 ‘증언영상’은 당시 희생자들이 서북청년단체 폭력과 학살을 증언한 기록이며, 1건의 서북청년단원의 구술 증언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토벌당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평범한 주민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문자료집’의 내용은 4·3 당시 생산된 기사들은 서북청년단의 결성에 대한 기사부터 한반도 내의 좌우익간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4·3이후의 기사들은 4·3당시 우익청년단의 학살에 대한 증언, 그들의 학살 진상을 알리는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이 우익단체와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우익단체들의 폭력과 학살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익단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기록들이다. 4·3의 배경과 전개에 있어서 우익단체의 폭력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만큼 4·3의 원인에 많은 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부가 육지에서 제주도로 파견한 단체이다. 즉, 우익단체의 파견과 그들의 제주도 활동에 대한 규명은 정부의 4·3대응 규명과도 관련 있다. 따라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행한 폭력과 학살에 대한 기록 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진압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 3) 좌익단체

‘좌익단체’에 대한 기록은 56건으로 ‘자료집’ 5건, ‘해외수집자료’ 5건, ‘신문자료집’ 46건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수집자료’의 경우 남한 내 공산당 활동을 보도한 외국신문자료와 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이다.

‘자료집’ 5건 중 4건은 4·3위원회가 생산한 ‘제주 4·3사건 자료집1권,7-9권’으로 1권은 4·3과 관련된 기사를 교정하여 편집한 자료집이고, 7-9권은 미군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좌익단체에 대한 기사와 좌익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신문자료집’은 해방이후 한반도에서의 좌익단체 활동과 제주도 남로당의 활동에 대한 기사 그리고 4·3이후 남로당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기록의 내용과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단체의 활동을 외부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으로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남로당 제주도당 등의 조직과 그들의 사고를 알 수 있는 내부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좌익단체 활동과 정부와 미군정의 대응은 4·3의 배경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인민위원회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을 밝히는 일은 인민유격대의 성격을 밝히는 것과 연결됨으로 관련기록의 폭넓은 수집이 요구된다.

### 4) 인민유격대

다음으로 ‘인민유격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408건이 존재하며, ‘기타 단행본’ 1건, ‘자료집’ 10건, ‘증언영상’ 47건, ‘사진’ 3건, ‘신문자료집’ 347건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증언영상’의 경우 인민유격대의 습격 및 약탈에 대한 구술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낮에는 토벌대에게 밤에는 인민유격대에게 시달리던 제주주민들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과 ‘신문자료집’의 경우 인민유격대의 습격과 토벌대의 교전을 확인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제주4·3사건자료집’을 보면 미군정과 군 · 경의 일일보고, 유격대의 습격, 토벌대의 작전 수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

으며, 신문기사 역시 습격과 교전에 대한 보도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4·3의 규명 및 성격 규정을 위해 인민유격대에서 생산된 인민유격대 내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한데, 아주 적은 수의 기록만 소장되어 있다. 인민유격대 내부기록은 ‘기타 단행본’ 1건인데 1949년 이덕구가 사살될 때 노획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한문에서 한글로 교정하여 1995년 발간한 단행본 ‘한라산은 알고 있다’이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유격대의 활동과 유격대가 무장투쟁을 결정한 이유, 조직의 구조와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2003년 발간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인민유격대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유격대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기록과 4·3연구와 진상규명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 5) 한국 정부

다음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기록은 총 247건 있으며 ‘자료집’ 21건, ‘기타단행본’ 5건, ‘해외수집자료’ 1건, ‘기록영상’ 2건, ‘신문자료집’ 218건이다.

이 중 ‘자료집’과, ‘기타단행본’, ‘해외수집자료’, 4·3 당시 생산된 ‘신문자료집’ 176건의 기록은 4·3 당시 정부의 정책과 4·3에 대한 대응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그 구성은 신문기사 외에는 국무회의회의록, 대한민국관보, 제헌국회 속기록 등 1차 사료와 이를 교정 편집한 ‘제주4·3사건자료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4·3사건자료집’은 4-6권이 해당되며 4-6권의 세부 분류는 정부문서(국무회의록, 대통령재가문서, 국회속기록, 국내잡지)와 군·경자료, 대한민국 관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4·3진압을 위해 경관 증파, 계엄령 선포 등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군경 자료는 정기보고와 함께 작전 명령 및 인사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이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신문자료집’과 ‘기록영상’이 있으며 이승만 정권의 4·3 책임에 대한 기록으로서 계엄령에 대한 기사가 확인된다.

## 6) 토벌대

토벌대에 대한 기록은 1,014건으로 ‘자료집’ 13건, ‘기타단행본’ 1건, ‘기록영상’ 3건, ‘증언영상’ 263건, ‘신문자료집’ 735건이다.

‘신문자료집’을 먼저 살펴보면 4·3 당시 생산된 기록의 경우 토벌대와 유격대의 교전을 다루는 기사와 토벌대의 토벌 결과를 다루는 기사가 주된 기록이며, 김익렬 연대장의 4·28평화협상, 박진경 연대장의 암살사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4·3 이후 생산된 기사의 경우 토벌대의 학살 진상을 알리는 기사가 주를 이루며 피해자들의 경험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증언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언영상’의 경우 모두 토벌대에 의해 고문, 학살 등의 피해를 본 희생자들의 구술 증언으로 토벌대의 학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료집’과 ‘기타단행본’의 경우 군·경의 역사에 대한 자료집들과 군·경의 토벌 기록이 있으며, 군·경의 토벌기록은 ‘제주 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제 47호’와 ‘제주 4·3사건자료집 5권, 7-9권’이 있다. ‘제주 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제 47호’는 군·경의 4·3초기 진압작전과 이후 4·3 진압을 맡은 11연대, 9연대, 2연대,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해병대사령부의 진압작전을 내용으로 하며, ‘제주 4·3사건자료집 5권, 7-9권’은 군·경의 일일보고와 활동보고 그리고 작전 명령, 인사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록영상’은 당시 9연대에 속했던 대원들의 인터뷰로 그 내용으로 토벌과 정찰 방식 등에 대한 것이다.

## 7) 주민

‘주민’에 대한 기록은 총 524건 존재하며 기록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었을 때 ‘여성’, ‘디아스포라’, ‘수형인’, ‘피난민·소개민’, ‘선생·학생’, ‘아동’, ‘민보단’, ‘주민생활’로 나눌 수 있으며, 구술 증언이 이들의 기록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증언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주민 관련 기록의 예시

집단	기록 형태 (건)	기록 예시	합계 (건)
여성	기록영상(8)	진아영 할머니 증언1편	53
	증언영상(16)	여성수난 증언(강위조)	
	방송·영화(1)	생방송 화제집중 '55년의恨 무명천 할머니'	
	신문자료집(28)	4·3과 여성인권	
디아스포라	기록영상(1)	재일본 4·3유족회 발족 영령위령 굿	170
	증언영상(19)	재일제주인 증언(고기생)	
	신문자료집(151)	「4·3」 재일동포의 삶 문학 평론대상 삼아	
수형인	유물사진(2)	사진-1(행방불명 수형인)	181
	기록영상(5)	군사재판에 대한 인터뷰(양금석)	
	증언영상(22)	광주, 인천형무소 수형인 증언(고문화)	
	방송·영화(3)	4·3특별기획 '수형인, 끝나지 않은 재판'	
	신문자료집(149)	수형인·국가유공자 4·3희생자 추가 결정	
피난민· 소개민	증언영상(11)	피난생활 증언(고성준)	36
	신문자료집(25)	비참했던 4·3 소개민들의 삶 증언	
선생· 학생	유물사진(7)	사진-12 (안덕공립국민학교제14회 졸업기념, 1947.5.27)	54
	신문자료집(47)	4·3 사망·행불 학생 희생자 109명	
아동	신문자료집(10)	어린이·노인 등 464명 4·3희생자 잠정 확정	10
민보단	증언영상(1)	민보단 증언(임시혁)	16
	신문자료집(15)	민보단 부단장 등이 피살	
주민 생활	증언영상(3)	축성작업 증언(임부현)	4
	신문자료집(1)	반세기 이어온 이념 갈등 '상흔' <sup>57)</sup>	
합계			524

<표 25>의 내용과 같이 먼저 ‘여성’관련 기록은 53건(기록영상 8건, 증언영상 16건, 방송영화1건, 신문자료집 28건) 존재한다. 기록의 주된 내용은 4·3당시 여성들의 생활, 여성이 받은 학살, 성적인 피해, 그리고 학살로 청년계층 다수가 사망하면서 4·3이후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겪은 어려움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유격대활동, 여성수형인 학살 기록이 확인된다. ‘여성’관련 기록 대부분은 증언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4·3 이후 규명운동 과정에서 4·3 여성의 인권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생산되었다. 이는 ‘신문자료집’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기록은 170건(기록영상 1건, 증언영상 19건, 신문자료집 151건)이 존재한다. 4·3당시 학살을 피해 많은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떠나

57) 4·3유적에 대한 기사로 강제동원 축성의 흔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 정착하면서 디아스포라 제주인이 되었다. 이들 재일제주인들은 문학작품의 발표를 통해 4·3 규명운동에 앞장섰고 이에 기록 또한 재일제주인들의 도일경험관련 기록과 그들의 문학작품 및 4·3 규명 운동에 관한 기록으로 양분 된다.

따라서 ‘기록영상’과 ‘증언영상’은 재일제주인들의 증언 기록으로 4·3 전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일본으로 넘어간 사연이 담겨있는 한편, ‘신문자료집’의 기록은 재일제주인들의 삶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재일제주인들의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기사를 할 수 있다. 주로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을 비롯한 재일 동포 예술·문화에 대한 기사, 일본 내 4·3 유족회의 결성 및 희생자 신고와 추모사업 등에 대한 기사가 존재한다.

한편, 기록의 구성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제주인 기록은 증언 기록 외에는 신문보도와 같은 외부기록으로 재일제주인들의 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재일제주인들의 4·3규명운동과 작품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재일제주인 내부 기록의 수집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수형인’에 대한 기록은 181건(유물사진 2건, 기록영상 5건, 증언영상 22건, 방송영화 3건, 신문자료집 149건)이 있다. 기록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수형인들의 증언 기록으로 수형인들이 당시 수형된 이유, 재판의 경험, 수형소에서의 생활과 취조, 수형 중에 있었던 폭력과 고문에 대한 기록이다. 둘째는 진상규명의 기록으로 수형인들의 재판에 대한 분석, 수형인들의 희생자 인정 촉구, 희생자 인정 과정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외에 ‘피난민·소개민’, ‘선생·학생’, ‘아동’, ‘민보단’, 4·3 당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소장되어 있으며, 기록의 양은 각각 36건, 54건, 11건, 16건, 4건이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각 집단의 4·3 당시피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 기록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피난민’의 경우 학살 경험과 재산 피해에 대한 기사와 증언이 확인 된다. 한편, ‘선생·학생’의 경우 ‘유물사진’과 ‘신문자료집’기록이 있다. ‘신문자료집’에서는 4·3 당시 학생의 희생과, 4·3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4·3 당시 학생과 교사들이 3·1절 발포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하는 등의 활동과 뼈라를 뿌리는 활동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유물사진’은 학생들의 단체사진이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경우 ‘신문자료집’기록을 살펴보면 4·3 당시 아동 학살을 규명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민보단’과 ‘주민 생활’을 살펴보면 ‘민보단’의 경우 ‘신문자료집’기록을 통해 4·3 당시 주민들이 민보단으로 편성되어 토벌대의 활동을 일부 부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생활’에 대한 기록은 ‘증언영상’과 ‘신문자료집’을 통해 4·3당시 강제동원과 축성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난민 · 소개민’, ‘선생 · 학생’, ‘아동’, ‘민보단’, ‘주민 생활’에 대한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은 각각의 집단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다. 예를 들면 4·3당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유격대와 함께 뼈라를 뿌리거나 유격대의 연락책을 담당하였으며 유격대 수뇌부 인사들 중에는 교직에 종사했던 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4·3당시 교사와 학생들은 유격대와 전혀 상관없어도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문과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신문기록이 거의 전부이다. 이는 다른 계층들도 마찬가지이다. ‘소개민’, ‘아동’, ‘민보단’ 모두 그들의 활동과 4·3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매우 부족하며 기록이 주로 신문기사에 편중되어 있다.

사학계에서 생활사연구가 활발해지면서 4·3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4·3 당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위 집단들에 대해 더욱 다양한 기록의 수집이 필요하며, 기록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 예를 들면, 노인과 주정공장직원, 군부대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 의사 등에 대한 기록의 수집 또한 필요하다.

## 8) 인물

특정 인물에 대한 기록은 218건으로 크게 유격대 수뇌부, 4·3당시 의인, 4·3 학살 주력 인물, 희생자로 나눌 수 있다. 유격대 수뇌부 인물 중에서는 이덕구, 김달삼, 4·3 의인 중에서는 문형순, 김익렬, 토벌대 인물 중에서는 박진경, 희생자 중에서는 진아영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등장하며 전체 219건 중 202건이 해당된다. 나머지 16건의 기록은 현경호, 한백홍 등 제주도의 항일운동가나 희생자 학살 주도자 들로 1건-2건의 기록이 생산되었다.



<표 26> 인물 별 관련 기록의 예시

이름	형태(건)	기록 예시	합계
이덕구	신문자료집(23)	제주폭도 수괴 이덕구 등 사살	23
김달삼	유물사진(6)	사진-15(김달삼)	25
	신문자료집(19)	아몰지 않은 상처 제주 4·3과 김달삼	
김익렬	기타 단행본(2)	김익렬장군 실록유고(4·3의진실)	23
	신문자료집(21)	제주4·3 학살 광풍 막은 '의인(義人)'을 기억하자	
문형순	신문자료집(7)	잊혀지는 비운의 독립운동가 '한국관 선들러' 문형순 선생	7
박진경	기타단행본(1)	한국전비사/육사졸업생/창군/박진경대령 53주기 기념식	95
	신문자료집(94)	경비대 제주도연대 박 대장 피살	
진아영	기록영상(9)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님 장례식 1편	29
	방송·영화(1)	생방송 화제집중 '55년의恨 무명천 할머니'	
	신문자료집(19)	한 맺힌 '턱 무명천' 이젠 푸소서	
기타	신문자료집(16)	제주4·3 학살 광풍 막은 '의인(義人)'을 기억하자	16
합계			218

인물별로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덕구'에 대한 기록은 '신문자료집' 23건으로 이덕구 사살에 대한 기사와 이덕구 생애에 대한 기사 그리고 합동위령제관련 기사가 있다.

김달삼에 대한 기록은 '신문자료집' 19건과 '유물사진' 6건이 있는데 '유물사진'은 김달삼의 학생시절 사진이며 '신문자료집'은 4·3경험자들의 김달삼에 대한 증언과 김달삼의 생애에 대한 기사가 이다.

한편 4·3 당시 4·28평화 협상을 주도한 김익렬 연대장에 대한 기록은 23건이 있다. '기타단행본' 2건은 그가 4·3의 배경과 4·28협상에 대하여 직접 글을 쓴 투고기사와 실록유고이고 '신문자료집' 21건은 4·3 당시 작성된 기사로 김익렬의 활동 및 4·28협상에 대한 기사가 있고, 4·3 이후 생산된 기록은 무력 진압을 막으려 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기리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기사이다.

문형순 경찰서장에 대한 기록은 '신문자료집' 7건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김익렬 연대장과 마찬가지로 학살을 막고자 노력했던 문형순 경찰서장을 기리는 보도기사이다.

2연대장으로 4·3당시 강경진압을 수행하다가 암살당한 박진경 연대장의 경우 '신문자료집' 94건과 '기타단행본' 1건이 있다. '신문자료집'의 경우

박진경 암살 당시 기사가 대부분으로 암살 및 범인검거에 대한 보도기사이며, 4·3 이후 생산된 기사는 박진경 연대장 비석 철거, 박진경과 김익렬 비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타단행본’은 박진경의 53주기 기념식 행사의 행사기록으로 행사 식순과 사회자 및 참석자의 연설 대본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진아영에 대한 기록은 총 29건이며 ‘기록영상’ 9건, ‘방송/영화’ 1건, ‘신문자료집’ 19건이 존재한다. 4·3 당시 학살로 인해 턱이 문드러져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고 다녀서 ‘무명천 할머니’라 불리었던 진아영은 4·3 학살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에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이 진행 되면서 그 삶을 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할머니의 작고 후에는 할머니의 삶터를 4·3 피해자들을 기리고 할머니를 추모하는 전시와 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외의 인물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주도한 한백홍<sup>58)</sup>, 현경호<sup>59)</sup>, 4·3 의인 김성홍<sup>60)</sup>, 강계봉<sup>61)</sup> 등에 대한 신문기사가 각각 1-2건씩 있다.

인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록이 특정 몇 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 기록이 신문기사로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부족하다. 인물기록은 인물자체 뿐만 아니라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에 유격대수뇌부, 토벌대 주요 인물,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4·3

58) 한백홍: 제주도의 항일운동가 이다. 1919년 제주도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4·3 당시 함덕리 청년 6명을 총살하려던 토벌대 앞을 막았다가 사살 당하였으며, 오랫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선정과 함께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다.-항일했지만 4·3 희생자 빨간 낙인... 100년 만에 독립유공자가 된 한백홍 선생, 『제주의 소리』, 2018.08.13.

59) 현경호: 제주중학교 초대교장으로 해방 후 제주 사회를 이끌던 원로였으나, 4·3 당시 박성내 유지학살 사건에서 희생되었다. 제주중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송덕비가 있다.-특집 4·3 70주년 기념 V 제주 4·3사건, 『국제뉴스』, 2018.4.17

60) 김성홍: ‘몰라 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4·3 당시 신흥리의 구장으로서 주민들의 성향을 묻는 토벌대에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보호하였다. 이에 ‘몰라 구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제주 4·3학살 광풍막은 의인을 기억하라 『제주의 소리』 2008.3.31.-

61) 강계봉: 4·3당시 순경이었던 그는 집단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보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 제주 4·3학살 광풍막은 의인을 기억하라 『제주의 소리』 2008.3.31.-

의인의 경우에도 의인에 대한 기념사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의인에 대하여 깊이 있는 기록의 수집이 필요하다.

### 제3절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향후과제

지금까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4·3 기록을 주제별 분류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기별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한 4·3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정부와 군·경의 활동 기록이 중점적으로 수집되어 있다. 한국 정부 및 군·경의 기록은 작전 명령서와 작전 수행과정이 시간 순으로 수집되어 있고, 관보, 제판 기록 등과 같이 정부의 4·3 대응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이 비교적 많이 수집되어 있다. 이에 4·3 당시 한국정부가 4·3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미군정과 인민유격대와 관련된 기록은 소장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체 내부의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미군정 관련기록의 경우 기록이 수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4·3 당시 상황보고, 활동 보고 기록들로서 미국 내부에서 4·3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고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인민유격대의 경우에도 신문기사와 주민들의 증언기록이 대부분으로 유격대의 4·3당시 활동에 대한 내부 기록은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교정한 ‘한라산은 알고 있다’가 거의 유일하게 유격대 내부 논의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군정과 인민유격대에 대한 진상규명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4·3 민간단체 내부에서 인민유격대와 미국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4·3의 온전한 맥락 구성을 위해, 이용자의 기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둘째, 1차 사료보다 가공된 2차 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3의 배경과 전개에 대한 기록 중 상당수가 4·3위원회에서 4·3진상조사를 위해 수집하여 편의를 위해 선별 편집한 기록이나, 기록을 수집한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교정하여 발간한 기록이다.

4·3기록 중 해외수집기록이나 4·3당시 생산된 아주 오래된 기록들은 육

필기록이 많아 필체에 따라 글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으며, 글을 알아볼 수 있어도 외국어, 한문, 지금과 다른 맞춤법 등으로 내용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교정 및 편집을 거쳐서 재생산한 기록은 다양한 이용자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록을 어떻게 편집하고 교정하는가에 따라 기록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본기록의 부족은 기록 내용 분석이 중요한 연구자들의 기록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수 있다. 특히, 기록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나, 4·3 당시 정부 및 미군정의 대응 등을 밝히는 연구의 경우 기록 원본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가공되고 편집된 기록 뿐만 아니라 원본기록 혹은 원본의 복사본을 함께 보존하고 서비스해야하고, 원본기록이 소실된 경우 원본의 수집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다음으로 4·3이후 4·3의 규명 및 기념 운동 시기와 관련된 기록들의 경우 첫째, 제주4·3평화재단과 4·3위원회 기록 위주로 기록이 수집되어 있다. 이에 4·3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이 4·3의 규명과 후속사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4·3의 규명 및 기념 운동과 관련된 공공기록은 4·3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4·3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의 청문회 기록 및 회의록, 4·3 진상 규명 과정에 있었던 우익집단 및 우익인사와 유족들의 재판기록 등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소장되어 있지도, 목록이 제공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 중 민간단체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신문기록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기록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내부의 논의나 지향을 확인하기 부족하다.

4·3 규명운동은 민간 주도로 시작된 만큼 민간에서 다양한 4·3 규명 활동이 있었다. 종교단체의 위령제, 유족회의 위령행사 및 전국 형무소 학살터 표식설치, 4·3 웅변대회, 문화·예술인들의 각종 작품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은 미미하다. 제주4·3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의 문서 기록이 다량 소장되어 있지만, 주로 행정기록으로 제주4·3연구소가 수행한 각종 역사교육, 구술 증언 채록 사업, 증언 본풀이 마당 등의 활동을 모두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소장기록이 관련 단체들의 활동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활동 결과물과 관련된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단체들이 특정 활동을 진행하기 까지 어떤 이유로 활동을 결정했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회의가 오갔고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 활동을 했는지 맥락을 알 수 있는 기록 없이 활동 결과만을 담은 영상, 사진, 판플렛 등의 기록만 소장되어 있다.

이런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기록으로는 각 단체의 4·3 규명 및 기념운동의 맥락을 보여주기 어렵다. 4·3 규명 및 기념운동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4·3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만큼 4·3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4·3의 규명 및 기념활동과정도 활동 맥락에 따라 세세하게 기록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 기록 중 4·3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상당수가 4·3의 진상조사를 위해 해외 및 국내에서 수집한 기록으로 4·3 배경 및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들이고 4·3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계획과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회의록, 기획서 등의 기록은 확인이 어렵다.

인물 및 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정부, 토벌대처럼 4·3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기록이 일반 주민이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기록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4·3진상조사보고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4·3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당시 수집된 기록이 그대로 제주4·3평화재단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계에서 4·3 당시 주민들의 생활과 4·3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 미시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4·3과 거시적, 담론적 의미의 4·3인식이 다른 점이 지적되었고<sup>62)</sup>, 또 4·3 민간단체 내부에서도 4·3의 전체적인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제주도 마을단위의 미시적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제기<sup>63)</sup> 되고 있는 만큼 4·3 당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기록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주민 계층 중에서도 아동과 노인에 대한 기록은 그 수가 10건 정도로 매우 적는데, 4·3 당시 아동과 노인의 학살이 신문 기사와 학술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술기록 수집과 같은 기록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62)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학회』 35, 225-228쪽

63) 양윤경, 박경훈, 허영선, 양동윤, 박찬식, 2016, 앞의 논문

특정 인물에 대한 기록의 경우 기록이 주로 이덕구, 김달삼, 김익렬 등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기록들도 신문기록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오래전 인물들이고 많은 인물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찾고 인물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4·3 경험자들의 구술 증언 등을 통해 4·3의인 혹은 상징적인 인물, 관련인물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4·3의 상징적 인물이나 의인을 발굴하는 것은 4·3을 기념하고 전승하는 활동으로서 4·3 후속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들의 삶이 4·3과 연관된 어떤 가치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4·3 의인 김익렬, 문형순은 부당한 학살을 막고자 했던 의로운 인물로서,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은 잔인한 학살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의와 평화, 인권과 같은 가치를 후세에 전한다. 또한 4·3 민간단체 내부에서도 4·3 의인 발굴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4·3인물의 발굴과 관련 기록의 수집이 필요하다.

사건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물의 영향을 받아 맥락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시간, 공간, 인물에서 비롯되는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을 수집하여 기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다양한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4·3의 경우 인민유격대와 미군정에 대한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학계와 4·3민간단체들을 통해 계속 지적되고 있고, 4·3의 의미와 가치의 규정 및 기억의 전승 측면에서 여전히 기억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기억 투쟁과 4·3의 규명 및 기념 운동은 4·3의 또 다른 맥락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4·3의 세계화로 이어져 국제 세미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4·3의 기록화는 4·3의 배경이 되는 시기부터 현재까지 4·3과 연관된 다양한 단체와 공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기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바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 기록은 다양한 단체 및 인물, 계층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으며, 보고기록, 보도기사,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활동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인민유격대, 미군정, 4·3민간단체 등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단체와 관련된 기록 수집과 신문기록보다도 단체 내부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 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을 분석하고, 4·3연구와 4·3규명 및 기념 운동의 동향에 따라 재분류하여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록의 성격과 후속과제를 확인하여 앞으로의 4·3 기록 수집과 4·3규명 및 기념 운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을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3장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을 형태별, 생산연도별, 출처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및 분류체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록이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다. 형태별 분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기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의 기록들에 접근하고 싶은 경우 기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생산자 및 생산연도 추정의 어려움이다.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 중에는 원본기록을 교정·편집하여 재생산한 기록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재생산 기록의 경우 재생산한 생산자와 생산연도를 중심으로 목록이 작성되어 기록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원래 기록의 생산자와 생산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록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4장에서 시기와 인물 및 단체를 고려하여 주제분류틀을 설계하고 4·3 연구와 4·3 민간단체의 운동 동향을 파악하여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을 연계하여 그 성격과 한계를 밝히었는데, 주제 분석을 토대로 파악한 4·3 평화재단 소장기록의 성격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사료의 부족이다. 특히 4·3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기록들의 경우 기록을 모아 선별·편집한 2차 사료의 양이 많았으며 2차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집하였던 원본기록이 함께 보존되지 않아 원본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는 1차 사료 확인이 필요한 연구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둘째, 기록의 편중이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은 4·3배경과 전개와 관련된 기록의 경우 한국정부와 군·경 위주로, 4·3이후의 기록의 경우 4·3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 위주로 기록이 수집되어있다. 이에 미군정, 인민유격대, 제주주민, 4·3민간단체 등 몇몇 단체의 4·3 관련 활동 확



인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소장기록이 관련 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위주로 수집되어 있다. 이는 특히 4·3이후 진상조사 및 기념 운동과 관련된 기록에 해당되는데, 주요 단체들이 특정 활동을 진행하기까지 기획 의도나 활동 준비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 없이, 행사 영상, 행사사진과 같은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들 위주로 수집되어 있다. 이런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기록은 관련단체의 활동 맥락을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4·3 특별법」의 개정이다. 「4·3 특별법」 제6조<sup>64)</sup>를 보면 4·3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들에서 기록을 수집할 수 있고 관련 기관과 단체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게 되어있으며 그 기간은 4·3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이다. 즉,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수집이 「4·3 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민간기록수집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기록 수집 방법으로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 구입, 사본 수집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sup>65)</sup> 그 밖에 4·3 기록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4·3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폭력과 억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정치적 이유로 기록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있어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협력을 꺼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기관 및 4·3 관련 단체들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

64) 「4·3 특별법」 제6조(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65) 「제주도민간기록수집조례」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관리 협약·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둘째, 민관 협력 수집네트워크의 설립이다. 4·3을 겪은 피해자, 4·3 연구자, 4·3 민간단체와 같은 4·3 체험자와 전문가를 기록 선별과 수집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sup>66)</sup>

또한 4·3의 규명 및 기념 운동이 오랫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민간단체들이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구술 채록 및 자료 발굴을 수행했기 때문에 민관 협력 수집네트워크를 설립하면 민간 기록 수집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기록의 통합관리이다. 4·3 기록은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외에도 국회, 국가기록원, 민간단체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4·3평화재단은 관련단체들의 협력을 얻어 기록을 수집하거나, 수집이 어려운 경우 4·3기록을 확인하고 선별해 그 목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한 기록 정보를 얻고 보다 쉽게 4·3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4·3은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4·3 민간단체들은 4·3 규명 및 기념 운동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되짚어 보는 한편, 4·3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같은 과제 해결과 4·3 전승을 위해 논의하고 유해 발굴, 4·3 기록 유네스코 등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4·3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발전시킬 자원이 부족하면 논의는 그저 논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카이브가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저 지배집단의 기록, 공식적 기억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대 기록학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4·3은 그 진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진상 규명 운동 과정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관계되어 있다. 이에 4·3의 추가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4·3 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4·3 규명에 필요한 다양한 단체의 기록을 수집하여 이용자들의 기록요구와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물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분석함에 있어 모든 4·3관련 민간단체와 관

---

66) 이상민, 2016, 앞의 논문, 16-17쪽

런 공공기관 전체기록을 분석한 것이 아닌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4·3 관련 전체 기록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이러한 후속 연구와 4·3규명 및 기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89호, 2016.11.3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29호, 2016.11.23

### 【정부간행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선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8, 『화해와상생-제주 4·3위원회 백서』, 서울: 일홍

### 【논문 및 학술지】

김영범, 2005,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제주4·3과 평화인권운동 소고, 『4·3과 역사』 5, 110-127쪽

고희범, 2016, 4·3운동 30년, 반성과 전망-4·3 70주년을 준비하며, 『4·3과 역사』 16, 13-20쪽

김창후, 2011, 4·3진상규명운동 50년사로 보는 4·3의 진실, 『4·3과 역사』 11, 157-204쪽

현진호, 2007, 제주 4·3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접근 방향, 『4·3과 역사』 7, 153-184쪽

이재승, 200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법학』 25, 481-502 쪽

김현준, 2011, 해외에서의 4·3연구 동향과 4·3의 세계화 방향, 『4·3과 역사』 11, 105-142 쪽

김종철, 2014, 제주 4·3사건 트라우마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영상적 재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건홍, 2015, 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기록학연구』 45, 189-217쪽
- 강초룡, 2018, 새마을운동 기록 연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 2016,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5·18광주민중항쟁 기록의 수집전략, 『기록학연구』 48, 5-44쪽
- 고성만, 2008, 4·3위원회의 기념 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 비평』 82
- 박찬식, 2012, 제주4·3사건 관련 행형자료와 형무소 재소자-서대문, 마포, 광주형무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0
- \_\_\_\_\_,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 『4·3과 역사』 1
- 이경주, 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2
- 서승, 2004,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격과 가능성-제주도의 역할, 『4·3과 역사』 4
- 박미선, 2009, 4·3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현기영과 현길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혜경, 2000,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굿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18
- 김태일, 2010, 1945년-1955년의 제주지역, 4·3사건 관련 유적 분포 및 주거건축물의 특징 연구, 『濟州島研究』 34
- 양정심, 2006,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의식, 『한국근현대사연구』 37
- \_\_\_\_\_, 2007, 4·3항쟁과 남로당 제주도당, 『수선사학회』 27
- 김평선, 2010,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 분석: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4·3과 역사』 10
- 염미경, 2017,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화, 『4·3과 역사』 17
- 허영선, 2007, 주변인들의 인식을 통해 본 제주 4·3시기 아동학살 유형과 특징 『탐라문화』 30
- 이그나즈 아니타, 2016, 제주4·3사건과 주민의 동굴 피신생활, 『4·3과 역사』 16

- 함한희, 2010, 증언, 생활사, 구술사: 기억의 구술과 역사 4·3의 경험과  
재일제주인, 그 그리고 한국현대사
- 김환기, 2006, 재일 4·3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日本學報』, 69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학회』 35
- 임재홍, 부상일, 2003,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민주  
법학』 24
- 김창후, 고성만, 2006, 4·3희생자 유해 발굴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6, 11-30쪽
- 박경훈, 박찬식, 이규배, 2016, 제주 4·3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 『4·3과 역사』 16, 23-57쪽
-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  
연구』 51, 175-208쪽
- 김유경, 최외선, 김갑순, 2011,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생애사와 미술 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윤경, 박경훈, 허영선, 양동윤, 박찬식, 2016, 제주 4·3 70주년, 어떻게  
할 것인가, 『4·3과 역사』, 249-280쪽

## 【웹 사이트】

- 제주4·3연구소(<http://www.jeju43.org/>)
- 제주4·3아카이브(<http://www.43archives.or.kr/main.do>)
- 제주4·3평화재단(<http://www.jeju43peace.or.kr/>)

## 【신문기사】

- 제주 4.3 예술 아카이브 왜 필요? “가치전승, 시민서비스”, 『제주의 소  
리』, 2018.06.28.
- 4·3진실찾기 10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을 말한다, 『제민일보』,  
2007.04.07.
- 4·3 다큐 ‘레드헌트’ 상영될까, 『한라일보』, 1997. 11. 7
- 제주 4·3희생자 유해발굴 설명회, 『연합뉴스』, 2010.04.06

## < 국 문 초 록 >

4·3은 해방직후 한반도와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건으로, 2000년대 초반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억투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진상조사에서 미군정과 인민유격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부족했던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진상조사 이후 4·3의 후속사업으로 4·3교육과 4·3전승을 위한 문화 · 예술 행사와 활동의 필요성이 4·3 민간단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추가진상조사와 연구, 그 밖에 다양한 4·3 후속사업에 자원이 될 4·3 기록의 수집과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4·3기록의 수집 전략 마련과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3연구 동향을 고려한 주제 분류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수집되어야 할 4·3기록의 범위와 4·3기록이 가지는 가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4·3기록의 수집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의 기록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제주4·3평화재단의 소장기록을 형태별, 생산연도별, 출처별로 분석하여 그 성격과 특징을 확인했다.

셋째, 제주4·3평화재단의 4·3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제별로 기록의 특징을 살피고 기록의 결락과 향후과제를 확인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시기별, 단체 및 인물별로 주제 분류를 설계하고 4·3연구와 4·3 규명 및 기념운동의 동향을 고려하여 세부주제를 선정했다.

본 연구는 4·3기록 자체에 대한 분석과 4·3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한 주제 분류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되거나, 4·3기록의 수집과 추가 진상조사, 4·3후속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ords of the Jeju 4·3 resistance :with a focus on the records in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Seo, yoo-lim

Department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

April 3 Uprising of Jeju happened in the middle of complicated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right after Korea took back its independence. There was a fact-finding investigation into it in the early 2000s, but its struggle of memory and controversy continues on. It has been pointed out consistently that there was a lack of effort to investigate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people's guerrilla unit in the investigation of the early 2000s. There have been requests for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After the government's fact-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event, the private organizations related to it have continued to raise a need for its follow-up projects including culture and art events and activities to education people about the event and transmit its memories. It is thus necessary to collect a variety of materials about the event, which will be used in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and researches and many different follow-up projects of the event, and provide them to users.

This study thus designed topic categories to take the trends of researches on the April 3 Uprising of Jeju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et strategies for collecting its records and improving users' access to them. The study first checked the scope of its records that should be collected and their values.

Secondly, the study then examined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of

Jeju 4.3 Peace Foundation, which is in charge of collecting and managing records about the event, and analyzed the records housed by the foundation by the form, year of production, and source to figure out their nature and characteristics.

Finally, the study categorized the records about the event housed by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by the topic,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by the topic, and checked missing records and future tasks. Topic categories were selected by the period, organization, and figure, and detailed topic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rends of researches on the event and movements to investigate and commemorate the event.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topic categor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records about the April 3 Uprising of Jeju and the trends of its researches to figure ou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housed by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and increase user access to the records.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other researches on the topic, collection of its records,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the event, and follow-up projects.